

연구총서 2000-20

러·북관계 변화추이와  
푸틴의 대북정책 전망

여 인 곤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러·북관계는 1990년 9월 한·소 수교이후 악화되었다가 김일성 사후, 즉 1994년 후반기부터 변화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러시아 정부의 외교노선 전환, 김정일의 3년간 ‘유혼통치’와 1998년 9월 공식집권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러·북관계 변화는 동북아 안보와 경제 질서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보고서는 1994년 후반기 이후부터 2000년 후반기까지 러·북관계 변화추이를 분석·고찰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전망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 1. 러시아의 외교노선 변화와 동북아정책 기초

러시아 정부의 외교노선 변화과정은 1991년말 신생 러시아 출범이후부터 1992년 말까지 약 1년 동안의 친서방 외교, 1992년 말부터 1996년 중반 대선까지의 유라시아 외교, 1996년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전방위 외교로 구분될 수 있다. 엘친 대통령은 약 1년간 친서방외교를 적극 수행하였으나 NATO의 동구 확대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되고 서방의 경제지원과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2년 말에 외교노선을 서방뿐만 아니라 「독립국가연합」(CIS)과 동아시아 등을 중시하는 유라시아 외교로 전환시켰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패권정책을 견제하고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신군사독트린」을 1993년 11월 발표하였고, 미·일 신안보체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으로 1996년 4월 중국과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를 선언하였다. 이를 통해 안보가 공고히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비교적 수동적, 방어적이었던 유라시아 외교노선을 1996년 대선을 계기로 능동적, 공세적인 전방위 외교노선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외교노선의 전환을 통해 국제문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러시아 출범이후 계속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서방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 1월이후 푸틴 대통령은 ‘강한 러시아’ 건설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옐친 시대의 전방위 외교노선을 견지하면서 경제실익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동북아 역내에서 ①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 ② 무기수출 확대, ③ 아·태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등을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북아지역에서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접경지역에서 국가간 무력충돌이나 분쟁 방지, 중국과의 우호관계 강화, 미국과 비대결적 관계 유지, 일본과의 협력관계 활성화, 남북한과의 긍정적인 관계발전,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창설 등을 중시하는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1990년 9월 한·소 수교이후 러시아 정부는 대남북한 관계에서 한국 중심의 외교를 수행하였다. 이는 당시 러시아의 친서방 외교노선 및 한국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와 경제지원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2년말 이후 러시아의 유라시아 외교노선으로의 전환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한국의 투자, 한국의 경협 차관 제공 중단,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소외 등으로 1994년 후반이후 러시아 정부는 남북한에 대해 균형된 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균형된 남북한외교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기조는 한반도 안정유지, 한반도 비

핵화, 남북한과의 경제관계 발전,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 2. 러·북관계 변화추이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유신통치’가 시작된 1994년 후반기부터 2000년 후반기 현재까지 러·북관계는 1961년의 군사동맹조약이 폐기된 1996년 후반기와 「러·북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이 체결된 2000년 전반기를 기준으로 관계재정립 모색기(1994년 후반기~1996년 후반기), 정체기(1997년 전반기~1999년 후반기), 재정립기(2000년 전반기~현재)로 그 변화를 특징지을 수 있다.

### 가. 관계재정립 모색기(1994년 후반기~1996년 후반기)

러시아는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약 2년 동안 1990년 한·소 수교이후 악화되어 온 대북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기반을 정치, 안보·군사, 경제 면에서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는 1994년 10월 미·북간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미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 가능성이 또한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러·북 양국은 새로운 경제관계의 발전에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북한은 러시아의 언론과 대한민국 무기수출에 대한 불만 및 1996년 러시아 대선에서 주가노프 공산당 당수의 집권에 대한 기대 등으로 1996년 후반기까지 대러관계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 나. 정체기(1997년 전반기~1999년 후반기)

이 시기에 러시아는 동맹관계가 청산된 북한과의 관계를 보편적인 국가간 관계에 기초된 선린우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는 NATO의 동구로의 확대, 코소보 사태 등으로 유럽지역 문제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북한도 또한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계속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러·북간 정치관계의 발전은 제한적이었고, 북한의 핵 재개발 의혹과 미사일 문제가 노정됨으로써 안보·군사 면에서 갈등이 표출되었다. 또한 러시아의 경제난에 따른 1998년 8월 모라토리엄 선언, 북한의 1996년 수해와 1997년 가뭄 등으로 인한 경제난 가중 때문에 양국 경제관계에도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다. 재정립기(2000년 전반기~현재)

2000년 전반기이후 러·북관계는 1961년 동맹조약을 대체하고 양국간 기본관계를 규정하는 신조약 「러·북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소 수교이후 약 10년만에 냉각기를 청산하고 보편적인 국가간 관계로 재정립되었다. 안보·군사면에서는 2000년 6월 13~15일 남북정상회담 직전 김정일의 방중, 남북정상회담 직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과 방북 등을 통해 러·중·북한간 3각 안보협력이 긴밀하게 되었다. 또한 러·북 양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협관계 발전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러시아간 3각 경협을 적극 모색 중에 있다.

### 3. 푸틴의 대북정책 전망

#### 가. 러·북관계 강화요인과 제약요인

상기와 같은 러시아의 외교노선 변화과정 및 동북아와 한반도 정책 기조, 그리고 1994년 후반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러·북관계 변화추이를 고려해 볼 때, 양국관계의 강화요인은 푸틴과 김정일 양국 지도자의 접근 필요성 인식, 러·중·북한간 공동의 안보이해, 한·러 경협이 부진과 남북관계 진전, 러시아 좌파 인사들의 친북한 로비활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1994년 후반기 이후 러·북관계 발전을 제약해 온 요인들은 양국의 경제난과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무기 제공, 미·북 및 일·북 접근 등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에서 양국의 경제난과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는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러시아 대내정세와 대외정책 전망

푸틴 대통령은 엘친 전대통령의 개혁정책 실패로 노정된 부정부패, 경제난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 범죄 증가 등의 산적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강한 정부’를 기반으로 하되 국가가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 적극 개입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주도의 발전전략’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의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 보고서에 의하면 1998년 -4.9%, 1999년 3.2%이었던 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2000년 5.5%, 2001년



3.0%로 예상되고 있다. 대외정책과 관련, 푸틴 대통령은 전방위 외교 노선을 유지하되 경제실익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현실주의적 정책들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일간 신안보체제와 중·러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푸틴 대통령은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실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 우호관계 강화, 비대결적 대미관계 유지, 대일 협력관계 활성화, 무기수출 확대, 균형된 남북한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 푸틴의 대북정책 전망

러시아의 향후 대내정세와 대외정책을 상기와 같이 예상할 때 푸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대북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1) 정치면

러시아와 북한은 21세기의 양국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2000년 2월 9일의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과 7월 19일의 「조·러 공동선언」을 기초로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은 양국관계가 재정립 상태에서 벗어나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북, 일·북간 접근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러시아는 정부차원에서 대북관계를 확대하고자 노력할 것이나 국가두마에서 공산당 의석이 44석이나 감소하였음을 고려할 때 러시아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관계는 다소 약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 러시아내 좌파 및 민족주의 인사들의 의회와 언론에 대한 친북 로비활동

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 (2) 안보·군사면

러시아는 1~2개 핵폭탄 제조를 위한 충분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핵 연구와 개발을 완전히 은폐한 가운데 속도만 늦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 방지를 위해 한·미·일 등과 협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핵문제로 미국 등이 북한에 군사제재를 가하거나 강제사찰하는 데는 반대하고 협상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군사무기와 기술의 수출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바쇼프 러시아 국방부 대외협력국장은 “우리는 한반도 군사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 군 고위인사들의 교류를 확대할 것이나, 러시아의 경화 요구로 대북 무기판매는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무기의 부품공급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향후에도 한국에 대한 경험차관 채무의 일부를 군사무기로 상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구소련식 무기체계를 갖고 있는 북한의 불만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미사일 문제와 관련,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 NMD와 미·일의 TMD 계획이 가시화되고 미·북, 일·북 접근이 더욱 이루어질수록 러·중·북한간 3각 안보협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전세계적인 미사일 및 미사일기술 확산금지 통제체제(GCS) 구축을 계속 주장하는 한편, 북한을 GCS에 참여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 (3) 경제면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러시아 경제는 회복추세에 있으나 북한이 1999년 GDP 6.2%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각한 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부족 등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러·북간 경제관계의 정체가 예상된다. 러시아는 북한과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의 정례화를 통해 양국 경제관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러·북간 경제협력에서는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 북한의 경화결제 능력 부족, 북한 경제정책에 대한 러시아 기업인들의 불신감 등과 같은 선결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남북한 경협이 활성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경제적 실익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초 이래로 제안하고 있는 남북한과 러시아간 3각 경협의 실현을 계속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구소련이 북한에 약 70개의 공장과 발전소를 건설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북한의 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현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경의선과 경원선 철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수송량이 5~6배 증가하고 컨테이너당 300달러 절감되리라는 것이 러시아측의 추산이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경제난에 처해 있는 북한과의 양자간 경제협력보다는 남북한과 3각 경협을 통해 실익을 도모하는 실용주의적, 현실주의적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4. 우리의 대응방안

##### 가. 정치면

우선적으로 우리 정부는 다수 국민들과 국가두마 과반수 이상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지지하고 10년간 유지되어 온 한·러 간의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0년 9월로 한·소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학계, 기업인, 언론인, 관료로 '대러정책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지난 10년간 한·러관계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향후 10년간의 중장기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북한 문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1년 푸틴 대통령의 방한시 러·북관계의 발전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도 상응함을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정상회담 등 남북대화가 중단되지 않고 정례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러시아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푸틴 정부는 남북한에 균형된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남북정상회담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자국의 경제이익을 확보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복원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3각 경협 등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이익 확보를 어느 정도 용인하되, 러·북관계 확대가 한반도 안보와 남북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 한다.

2000년 2월과 7월 체결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과 「조·러 공동선언」을 기초로 러·북관계가 재정립되었기 때문에 향후 양국간

정치적 대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러시아 정부가 대한국 관계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점은 자국에 대한 소규모 투자와 함께 한·미, 한·일, 한·중 관계에 상응하는 고위인사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양국 정계, 관계,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정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현재 외교통산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199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러 포럼』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9년 12월 총선에서 3선에 성공했고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을 수행하여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정홍식(유리 정) 국가두마 의원은 12만 고려인의 지위향상과 한·러관계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그를 정기적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나. 안보·군사면

한반도와 관련한 안보·군사문제의 발생시 러시아 정부에 사전통보 하거나 사후 설명함으로써 1996년 4월 4자회담 발표 때와 같이 러시아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개발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 미사일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실을 용인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세계적인 미사일 및 미사일기술 확산금지 통제체제(GCS)를 구축하고 이에 북한을 가입시키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미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MTCR)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을 이에 가입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미·러, 미·중 간에 안보·군사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 중·러·북한의 3각 안보협력 강화가 한반도의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또한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고위 군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보·군사 면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다. 경제면

남북정상회담 합의 발표이후 러시아 정부는 북한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대한 공동참여 의사를 우리 정부에 밝혔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과 석탄 및 에너지 개발, 북한내 기업 현대화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한반도 중단철도 재건 등 17개 분야에서의 남북한과 러시아 간의 3각 협력을 제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실현 가능한 분야에 대해 단·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할린과 이르쿠츠크의 원유와 가스전 개발 같이 많은 시간과 자본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는 미, 일 등과 콘소시엄을 형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001년 푸틴 대통령의 방한시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인 양국간 교역과 투자 확대 등 경제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소 수교이후 우리 정부는 나호트카 한국기업공단 설치, 사하(야쿠티아) 공화국 천연가스전 공동개발, 과

학기술 관련 74개 공동사업 등에 합의하였으나 한·러 양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약속된 사업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실행가능한 소규모 약속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KEDO 참여를 통해 경제적 실익 및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 바, 경수로의 일부 부품에 대한 공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또한 경의선과 경원선 남북한 철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럽 수출 컨테이너 화물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노선을 이용하면 연간 770만~1,700만 달러의 운임 절감이 가능하고 운송기간도 해상운송에 비해 15~17일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과 러시아 모두에게 물류비용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와 화물 보안관리 문제 등을 3국 협의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I. 서 론 .....	1
II. 러시아의 외교노선 변화와 동북아정책 기조 .....	3
1. 외교노선 변화 .....	3
가. 유라시아 외교(1992년말~1996년 중반) .....	3
나. 전방위 외교(1996년 중반 이후) .....	9
2.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기조 .....	12
가. 동북아정책 기조 .....	12
나. 한반도정책 기조 .....	16
III. 러·북관계 변화추이 .....	25
1. 관계재정립 모색기(1994년 후반기~1996년 후반기) .....	25
가. 러시아의 김정일 정권 지지와 북한의 불만 .....	26
나. 동맹조약의 폐기와 군사협력 지속 .....	34
다. 경제관계의 회복 모색 .....	38
2. 정체기(1997년 전반기~1999년 후반기) .....	45
가. 제한적 선린우호관계 .....	45
나. 핵·미사일 문제의 갈등 .....	52
다. 경협관계의 정체 .....	59
3. 재정립기(2000년 전반기~현재) .....	61
가. 신조약 체결 .....	61
나. 남북정상회담 지지와 푸틴의 방북 .....	65
다. 남북한·러시아간 3각 경협의 모색 .....	70



<b>IV. 푸틴의 대북정책 전망</b> .....	74
1. 러·북관계 강화요인 .....	74
2. 러·북관계 제약요인 .....	77
3. 푸틴의 대북정책 전망 .....	81
가. 정치면 .....	83
나. 안보·군사면 .....	84
다. 경제면 .....	85
<b>V. 우리의 대응방안</b> .....	88
1. 정치면 .....	88
2. 안보·군사면 .....	89
3. 경제면 .....	90
<b>참고문헌</b> .....	92

## I. 서 론

1991년 12월 소련붕괴 이후 출범한 러시아는 지난 9년간 큰 변화를 겪어 왔다. 옐친 전 대통령은 사회주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켜 민주주의를 법적,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시장경제 체제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경제적 혼란상태에 직면, 1998년 8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2000년 1월부터 사실상 대통령직을 수행한 푸틴은 ‘강한 러시아’ 건설을 내세우고 부정부패, 사회범죄, 경제난 등 옐친 시대의 부작용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외정책 면에서 옐친 전 대통령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친서방 외교노선, 유라시아 외교노선, 전방위 외교노선 등으로 대응하였고, 푸틴 대통령은 전방위외교라는 기본노선은 유지하면서도 옐친 시대보다 더 실용주의적, 현실주의적 대외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러·북관계는 1990년 9월 한·소 수교이후 악화되었다가 김일성 사후, 즉 1994년 하반기부터 변화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러시아 정부의 외교노선 전환, 김정일의 3년간 ‘유혼통치’와 1998년 9월 공식집권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러·북관계 변화는 동북아 안보와 경제 질서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1994년 하반기 이후부터 2000년 하반기 현재까지 러·북관계 변화추이를 분석·고찰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전망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서 제Ⅱ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외교노선 변화 과정 및 동북아와 한반도 정책기조가 분석되었다. 제Ⅲ장에서는 러·북관계 변화추이를 관계체정립 모색기(1994년 후반

## 2 러·북관계 변화추이와 푸틴의 대북정책 전망

기~1996년 후반기), 정체기(1997년 전반기~1999년 후반기), 재정립기(2000년 전반기~현재)의 3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제IV장에서는 상기와 같은 분석들을 기초로 러·북관계 강화요인과 제약요인을 도출하였으며 푸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전망하였다. 마지막 제V장에서는 러·북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정치면, 안보·군사면, 경제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II. 러시아의 외교노선 변화와 동북아정책 기조

### 1. 외교노선 변화

1991년 6월 임기 5년의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엘친은 동년 12월의 소련 붕괴 이후 신생 러시아의 대통령직을 계승하였다. 이후 그의 집권 시기는 1996년 6~7월의 대선을 전후로 하여 제1기(1991년말~1996년 중반)와 제2기(1996년 중반~1999년말)로 구분될 수 있다. 러시아는 헌법 규정상 2000년 6월에 제2대 대선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엘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약 6개월 남겨 놓고 1999년 12월 31일 전격 사임함으로써 푸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였다. 2000년 3월 26일 조기 실시된 러시아 제2대 대선에서 예상대로 푸틴이 당선되어 5월 7일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정부의 외교노선 변화과정은 제1기 신생 러시아 출범 이후부터 1992년 말까지 약 1년 동안의 친서방 외교, 제2기 1992년 말부터 1996년 중반 대선까지의 유라시아 외교, 제3기 1996년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전방위 외교로 구분될 수 있다. 본 논문의 중점 연구 분야인 러·북관계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7월 이후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외교노선 변화 과정도 제2기와 제3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가. 유라시아 외교(1992년말~1996년 중반)

엘친 대통령은 1991년말 소련이 붕괴하고 신생러시아가 출범함에 따라서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를 수정하고 약 1년간 친서방 외교

를 적극 수행하였다.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개혁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였고 이를 위한 대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하고 「선진공업 7개국회의」(G7), 「유럽공동체」(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태 및 기타 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구 확대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되고 서방의 경제지원과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1992년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부시 공화당 정부가 클린턴 민주당 정부로 변화되는 시점을 러시아 외교노선 변화의 기회로 삼게 되었다. 신생 러시아는 출범 초기의 과도한 ‘친미 로맨티시즘’으로부터 벗어나 외교노선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게 되었다.

이 시기 러시아 정부의 국제정세 인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냉전시대의 양극체제가 미국의 전반적 지배보다는 다극체제로 변화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초강대국 시대는 종식되었고 미국 이외에 세계무대에서 주요 행위자는 서구, 중국, 일본, 다수의 지역강국 및 러시아이다. 둘째, NATO 및 서구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발전이 있었으나 이들의 기본정책들은 계속 변화되지 않고 있고, 이는 서구와의 화해의 한계를 결정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점증적으로 러시아를 차별하면서 ‘하급동반자’(junior partner)로서의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 경제, 정치, 군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공산주의 이념과 구소련 공화국 및 동유럽의 상실로 서방에 의해 짓밟혔고 매달리고 있다. 셋째, 아·태지역은 세계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신속히 전환되고 있어 러시아의 유라시아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이나 러시아 극동지역은 아·태지역 통합과정의 밖에 있어 우려된

다. 넷째, 제3세계는 세계 및 지역 위협의 기본원천으로 바뀌고 있다. 전체주의 이후 국가들과 최빈국들의 사회, 경제, 인종 문제로 야기되는 위기와 대립이 있을 것이고 지역강국들은 무력사용을 해서라도 자신의 영향권 확보를 추구할 것이다.”<sup>1)</sup> 국제정세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러시아 정부는 안보이해를 중시하고 구소련 공화국과 동구에 대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덜 서방적이고 동방과 남방에 정향된 외교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1993년과 1995년 총선 결과 국가두마에서 좌파와 극우민족주의 정당들의 득세로 러시아 외교노선은 더욱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고 더 현실적, 실용주의적, 유라시아적 특징을 갖게 되었다.

1992년 12월 1일 발표된 『러시아 대외정책문서』와 1993년 11월 2일 발표된 『러시아연방 신군사독트린』<sup>2)</sup> 등에 나타난 이 당시 러시아 정부의 외교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 정부는 단기과제를 ① 러시아 주변에서 무력충돌과 분쟁의 방지, ② 구소련 공화국들에 약 30개 군사기지의 유지, ③ 『독립국가연합』(CIS)내 러시아인들의 인권 보호, ④ 유럽, 남아시아, 극동에서 지역 패권국가의 출현 방지, ⑤ 세계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일정한 지위와 기능의 보유 등에 두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CIS 내에서 러시아가 구소련의 핵전력을 완전히 통제하고 단일 경제권을 유지하며 집단안보조약을 체결한다. 동구가 러시아를 서방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일종의 완충지가

1) “Foreign Ministry Document Outlines Foreign Policy,” FBIS-SOV-92-232, pp. 3~5; Alexei Arbatov, “Empire or great power?” *New Times*, 1. 93, p. 24; Suzanne Crow, “Why Has Russian Foreign Policy Changed ?” *RFE/RL RESEARCH REPORT*, Vol. 3, No. 18 (May 1994), pp. 1~6.

2) “러시아연방 (신)군사독트린,” 『중소연구』, 18권 1호 (1994 봄), pp. 236~248.

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서방 강국이 러시아를 동구로부터 이탈시키려는 시도를 억제한다. 새로운 기초 위에서 동구국가들과 점차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미국과 관계에서는, 전략적 우호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되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되는 것을 저지한다. 구소련의 대외부채와 러시아의 G7 가입 문제에 미국이 적극 지지해 줄 것을 환기시킨다. 또한 러시아의 국가 회생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강력하고 기술적으로 발전된 서방국가들 및 타 지역 신흥산업국들과의 관계를 증진한다. 남아시아 및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지역강국이고 개발도상국 중 러시아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인도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란과 아프카니스탄 등이 민족적, 종교적 유대하에 CIS내 이슬람 국가들과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계획을 저지해야 하며 이 지역에서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한다. 아·태 지역의 통합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고립주의적 감정을 탈피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들과 잘 균형되고 안정되며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아·태지역의 안보확보를 위한 책임을 분담할 용의가 있다. 일본에 대한 관계에서 평화조약과 북방 영토 문제 등 전후 유산을 해결하여 일본의 자본을 유치한다. 대량과 괴무기를 만들려는 북한의 계획을 우려하며 한국과 무역,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것” 등이었다.

상기와 같은 정세인식과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던 러시아 정부는 우선적으로 NATO의 확대를 방지하고 CIS 국가들 간의 정치, 경제, 군사적 통합을 위한 「독립국가연합 헌장」을 1993년 1월 22일 민스크에서 채택하였다. 그러나 NATO의 동구 확대는 더욱 강화되었다. 「북대서양협력회의」(NACC)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보스니아 사태 등으로 야기된 동구의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동구국가들의

NATO 가입 요구가 증대하자 NATO는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FPP)를 1994년 1월 제창하고 NATO 확대의 점진적 과정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서 1994년 6월 1일까지 20개국이 서명하였으며 NATO는 이들과 수차례에 걸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1995년 『NATO 확대에 대한 연구』가 제시한 가입 기준에 입각하여 검토한 결과 체코, 폴란드, 헝가리가 가입을 위한 대화상대로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대통령위원회 위원이고 국가두마의 CIS 위원회 전문위원인 미그라냐(Migranyan)은 1994년 12월 10일 코지레프(Kozyrev) 외무장관의 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낭패들이 초래되었음을 비판하였다. 첫째, 폴란드의 NATO 가입의사를 인정함으로써 동구 국가의 NATO 가입에 청신호를 보낸 반면, 동구 국가의 NATO 가입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모순된 서한을 서방 국가들에 발송하여 결국 서방과의 타협안으로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가 합의되었다. 둘째, 러시아 정부는 1993년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에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이라크가 구소련과 오랫동안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러시아의 주요 채무국이며 장래 러시아 무기의 잠재시장임을 간과하였다. 셋째, 유엔 안보리의 러시아 대표는 보스니아에서 NATO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양하는 데 찬성하였으나 러시아와 사전논의 없이 NATO군 항공기가 보스니아의 세르비아 진지를 폭격하였다.<sup>3)</sup> 또한 한·미 양국이 러시아에 사전 통보도 없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사이의 4자회담을 1996년 4월 16일 전격 제의하고, 미국과 일본이 다음날 『신안보공동선언』을 함으로써 러시아 정부는 큰 불만을 갖게 되었다.

3) “러시아의 외교정책: 3년간의 결과,” 『중소연구』, 18권 4호 (1994/5 겨울), pp. 328~335 참조.



이와 같은 미국의 패권정책을 견제하고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신군사독트린』을 1993년 11월 2일 발표하고 러시아와 그 동맹국에 대한 무력공격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1996년 4월 25일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선언하였다. 이 선언에서 양국 정상은 미·일 신안보체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았으나 패권주의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미국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sup>4)</sup> 이와 같이 『신군사독트린』의 채택 및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안보가 공고히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비교적 수동적, 방어적이었던 유라시아 외교노선을 1996년 대선을 계기로 능동적, 공세적인 전방위 외교노선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방위 외교는 동년 1월 새로 취임한 프리마코프(Primakov) 외무장관에 의해 적극 추진되어진다.<sup>5)</sup> 러시아 정부는 이와 같은 외교노선의 전환을 통해 국제문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신생 러시아 출범이후 계속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서방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에 대한 외국 투자는 1992년 26억 달러, 1993년 29억 달러, 1994년 10억 5,000만 달러, 1995년 28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일본이 ‘선(先) 영토문제 해결, 후(後) 경제협력’ 입장을 고수하였고,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차관 제공도 약속된 30억 달러 중 14억 7,000만 달러만 집행된 가운데 러시아 정부에 의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의 지체로 1993년 8월 이후 중단된 상태이었다.

4) 민족통일연구원, 『주변 4국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환경』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18.

5) “Primakov Backs More Active Foreign Policy,” FBIS-SOV-96-121.

## 나. 전방위 외교(1996년 중반 이후)

러시아는 1996년 6월 대선을 실시하였으나 투표자의 과반수 획득자가 없어 엘친 대통령과 주가노프 공산당 당수가 7월 결선에 나선 결과 엘친이 임기 4년<sup>6)</sup>의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정부는 전방위 외교노선을 택하고 있는데 현 국제정세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국제상황은 다수 국가와 통합지향적인 기구들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치, 경제, 금융, 정보 과정의 다변적 통제 메카니즘의 발전 때문에 다극세계의 형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핵전쟁 위협의 축소와 국제관계의 비군사화 경향, 세계적 및 지역적 수준에서 통합과정의 증대 등으로 러시아 국내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리한 국제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세계 정치의 주요 문제들을 군사적 해결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와 동시에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문제 해결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된 반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분야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다수 국가들의 희망은 증가되었다. 독일 통일은 유럽의 지정학적 상황에 변화를 가져왔고 중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들이 점점 큰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에서 새로운 모순의 발생을 조장하고 경쟁을 강화할 것이다. 러시아 국가안보의 가장 위협적인 도전은 구소련 영토에 통제불가능한 반통합적 과정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고, CIS 거주 러시아인들의 지위 문제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관계에서 이중성이 노정되고 있다. 미국은

6) 소련 붕괴 이전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었으나 1993년 12월 채택된 러시아연방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면에서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을 바라지 않고 있는 반면, 러시아가 유라시아에서 안정화 역할을 담당하는 세력중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핵잠재력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미국과 동등한 동반자관계의 확립과 유지를 촉구받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정, 불법 마약거래, 국제테러 위협 등의 방지활동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 국경까지 접근하고 있는 NATO의 확대 경향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유럽의 세력관계를 러시아에 불리하게 변화시키며 러시아가 고립위험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NATO가 유럽의 전반적인 안보기구로 전환되고 있다. 경제부문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삼각구조가 지배하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와 원료자원을 수출하고 첨단기술 기계와 장비 및 소비품을 수입하는 대외경제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sup>7)</sup>

결국 1996년 중반 엘친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러시아 정부는 대규모의 대외적 침략위협이 감소되었으나 탈냉전의 국제상황에서도 국익 확보를 위해서는 강대국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경제난 등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균형된 외교정책을 수행할 때, 즉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이웃국가들 및 세계의 힘의 중심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킬 때 대내개혁이 더 잘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외교노선을 기존의 유라시아 외교로부

7) “엘친 대통령의 안보교서,” 『중소연구』, 20권 2호 (1996 여름), pp. 33~352; “러시아 대통령 의회 연두교서 연설,” 『중소연구』, 20권 4호 (1996/7 겨울), pp. 233~239; “Russian Federation National Security Blueprint,” FBIS-SOV-97-364 등 참조.

터 전방위 외교로 전환하였다. 1996년 6월 발표된 엘친 대통령의 「안보교서」와 1997년 12월 17일 그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연방 안보청사진」 등에 의하면, 러시아는 발전되고 있는 다극세계의 영향력 있는 일강국으로서의 지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의 수행을 외교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다음의 4가지를 중시하고 있다. ① CIS 국가들의 통합을 위한 국가연합체 형성, ②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들과의 동등한 동반자관계 발전, ③ 국제범죄와 테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 ④ 러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적 정치, 경제 기구들의 강화, 특히 유엔 안보리의 역할 강화 등이다. 우선 국제관계에서 러시아는 미국에 의해 통제되는 단극체제를 방지하고 다극체제를 발전시키며 강력한 핵잠재력에 의해 21세기 국가안보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증가되는 독립적 역할을 지지하고 일본과 독일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찬성하고 있다. 유럽문제 조정을 위한 러시아-독일-프랑스간 3각 체제를 형성하는 한편, 동구 국가들과 제반관계를 발전시키고 중근동 상황의 안정을 추구하며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강한 러시아’의 건설을 대선 선거구호로 내세웠던 푸틴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2000년 1월 10일 「러시아연방 신국가안보 개념」,<sup>8)</sup> 1월 18일 국가두마의 개원연설 및 3월 24일 「신대외정책 개념」<sup>9)</sup> 등에서 러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운 안보관이나 대외정책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93년 11월의 「러시아연방 신군사독트린」과 1996년 6월 엘친 대통령의 「안

8) 세종연구소, 「러시아연방 국가안보 신개념(전문)」, 통권 제2호(2000. 2).

9) “Security Council Views Foreign Policy Concept,” FBIS-SOV-2000-0324.

보교서」, 1997년 12월 「러시아연방 안보청사진」 등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의 집권이후에도 러시아 정부의 외교노선은 그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나시예프(Afanasiev) 주한 러시아 대사도 「한국언론재단」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푸틴 대통령의 외교노선을 전방위정책(multi-directional policy)으로 특징지었다.<sup>10)</sup>

## 2.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기조

### 가. 동북아정책 기조

러시아 정부는 동북아 역내에서 ①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 ② 무기 수출 확대, ③ 아·태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등을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동북아지역에서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접경지역에서 국가간 무력충돌이나 분쟁 방지, 중국과의 우호관계 강화, 미국과 비대결적 관계 유지, 일본과의 협력관계 활성화, 남북한과의 긍정적인 관계발전,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창설 등을 중시하는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양자관계 중에서 중국, 미국, 일본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에 현재 가장 중요한 국가는 중국이다. 엘친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1997년 4월 23일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어느 국가의 패권 추구에 반대하고 21세기 전략적 동반

---

10) Evgeniy V. Afanasiev, "New Leadership in Russia and Russian Internal and Foreign Policy, Asia-Pacific and Korean Peninsula Dimensions" (「한국언론재단」 주최 조찬강연회 발표논문, 2000. 5. 24).

자관계의 발전방향을 구체화한 「다극적 세계 및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는 ① 제3국이 러시아의 국가안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세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을 경고하고, ②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 악화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을 위해 러시아는 중국과 고위급 수준의 정례회동 체계를 강화하고 경제 및 무역관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sup>11)</sup> 1998년 러시아와 중국간 교역액은 56억 7,700만 달러 이었고, 이 중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39억 4,700만 달러, 수입은 17억 3,000만 달러이었다.<sup>12)</sup> 러시아는 그 동안 중국과의 접촉에서 본질적으로 미국보다 앞서고 있다고 여겼으나 1998년 6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시 중국을 범세계적인 열강으로 인정하고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게 된 점을 러시아의 이해를 침해하게 건드린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코소보 사태에 대한 NATO의 군사개입 이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중국·인도 3국의 ‘반(反) NATO 축’(Anti-NATO Axis)의 형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3)</sup>

국력이 약화된 러시아는 미국과 비대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 문제 및 세계의 전략적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에서 미국과 협조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냉전시기에 소련을

11) V. S. 마스니프프, “러시아와 중국: 아태지역에서 동반자관계의 전망”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와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공동주최 제9차 한·러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8. 10. 22~23), pp. 15~18.

12)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Russia*, 3rd quarter 1999 (London: EIU Ltd., 1999), p. 50.

13) “Anti-NATO Axis Could Pose Threat, Experts Say,” *Los Angeles Times*, (September 27, 1999, [www.latimes.com/cgi-bin/archsearch-cgi?DBQUERY](http://www.latimes.com/cgi-bin/archsearch.cgi?DBQUERY)).

억제하기 위해 형성되었던 군사동맹이 탈냉전과 신생 러시아가 등장한 시대에도 유지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한편, 아시아에서 10만명에 달하는 미국 군사력의 전진배치가 이 지역에서 평화, 안정 및 경제적 번영을 철저히 보장하고 군비경쟁을 억제한다는 관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미국이 왜 모든 지역에서 경찰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미국에 군사동맹들을 한꺼번에 해체하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으나 공동안보를 위하여 범지역적인 동반자관계의 수립 문제에 관해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4)</sup> 또한 미국과 일본이 적극 추진 중인 TMD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이 프로그램의 행동권에 러시아 극동 지역의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같은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과 군사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997년 8월 하시모토 일본 수상이 '유라시아 외교'라는 대외정책의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 러시아와의 근본적인 관계개선을 기본 목표들 가운데 하나로 설정한 이후 러시아의 일본 관계는 현저히 발전되고 있다. 정상회담을 포함한 일련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러시아는 2,000년까지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한 일본의 투자와 경험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현재 양국관계는 전후 약 50년 이래 최고로 우호적인 상태에 있다. 그러나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 양국의 견해가 아직까지 상당히 벌어져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 러시아인들의 약 80%가 일본에 영토반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14) 마스니코프, "러시아와 중국," p. 4; 『러시아 방송』, 1999. 8. 4.

있다. 러시아는 일본과 경제와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 증진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특히 평화조약 체결 이전에 일본과 ‘반(半)동맹과 같은 관계’(semi-alliance-like relations)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sup>15)</sup> 1998년 러시아와 일본의 교역액은 32억 8,100만 달러이었고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23억 9,100만 달러이었다.<sup>16)</sup>

둘째, 구소련은 세계 무기시장의 40%를 점유(연평균 140억 달러)하는 무기수출 대국이었으나 소련 붕괴이후 정치, 경제적 혼란으로 수출액이 급감하여 1994년에는 17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다. 러시아가 현재 천연자원 이외에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은 세계적 수준의 무기와 군사기술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1997년 8월 기존의 국영 무기수출사인 「로스바아루제니에」사 이외에 2개의 회사를 신설하고 고위급 회담과 군 수뇌부 상호방문 등을 통한 세일즈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무기판매에 관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sup>17)</sup>에 의하면 1991~1998년 누계에서 러시아는 356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출하여 미국(835억 달러)과 프랑스 (427억 달러)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1995~1998년 기간중 아시아 지역에서 거래된 무기(287억 달러)의 40%를 공급해 16%를 판매한 미국을 압도했다. 특히 러시아는 중국에 SU-27기 72대와 잠수함 4척, 구축함 2척 등을 판매했고<sup>18)</sup> 북한에는 1996년에 최초로 공격용 헬기 「미르 28」 20대를 수출하였다.<sup>19)</sup> 이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한국과 대

15) “NHK Interviews Russian Envoy Panov on Bilateral Ties,” FBIS-EAS-1999-0913.

16) EIU, Country Report, p. 50.

17) “U.S. Again Leads World Arms Sales.” ABC NEWS. Aug. 6, 1999, abcnews.go.com/sections/world/DailyNews/armssales\_990805.html: 「동아일보」, 1999. 8. 9.

18) 중국의 러시아 무기 및 군사기술 획득 현황은 김태호, “1990년대 중·러 군사협력의 현황과 전망,” 「중소연구」, 20권 1호(1996년 봄), p. 243 참조.



만 등에도 군사무기와 군사기술의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 정부는 아·태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치, 군사, 경제의 제반사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소련 붕괴 이후 약화된 자국의 위상을 재확립하고자 하고 있다. 21세기에 아·태지역은 세계의 정치, 경제적 발전의 주된 중심들 가운데 새로운 하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국가들과 대화 및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의 인식은 아·태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과정에서 러시아가 일정 정도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고, 러시아 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유라시아의 영향력 있는 열강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20)</sup>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을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의 안전을 담보해 주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이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경제면에서 러시아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협조를 확대하는 한편, 「아·태 경제협력기구」(APEC)에 1998년부터 정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가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

#### 나. 한반도정책 기조

1990년 9월 한·소 수교이후 러시아 정부는 대남북한 관계에서 한국 중심의 외교를 수행하였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은 당시 러시아의 친서방외교 노선 및 한국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와 경제지원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2년말 이후 러시아의 유라시아외교 노선

19) 「세계일보」, 1996. 7. 28.

20) 마스니코프, “러시아와 중국”, p. 7.

으로의 전환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한국의 투자, 약속된 30억 달러 중 14억 7,000만 달러만 집행된 상태에서 1993년 8월 한국의 경협차관 제공 중단,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소외 등으로 1994년 후반 이후 러시아 정부는 남북한에 대해 균형된 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1996년 중반이후 전방위외교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균형된 남북한외교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기조는 한반도 안정유지,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과의 경제관계 발전,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 (1) 한반도 안정 유지

한반도에서는 남한 사람들의 금광산 관광과 북한에 대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건설지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잠수정의 1996년 9월 강릉과 1998년 6월 속초 앞바다 침투사건, 1999년 6월 15일 연평해전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한 간에 냉전시대의 상호불신과 적대감이 상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자국이 지리적으로 단지 한 시간 반의 비행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한반도 상황이 안보면에서 특별한 관심사임을 강조하여 왔다.<sup>21)</sup> 한반도 불안정의 주요 요인이 남북한관계 때문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라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교차하고 있어 한반도는 잠재적으로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것이라는 점이 러시아측의 인식이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이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

21) Gueorgui F. Kounadze, "Russia's Foreign Policy in Evolving World and Prospects of Russia-Korea Relationship," 『외교』, 제31호 (1994. 9), p. 164.

치하고 있어 미국의 위기와는 바로 직결되지 않는 한반도에서 일정 수준의 긴장을 유지함으로써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sup>22)</sup>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이 자국의 국내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제반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첫째, 구소련 정부는 일관되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였으나 냉전종식 이후 러시아 정부는 주한미군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sup>23)</sup> 둘째, 북한의 돌발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던 1961년의 북·소 동맹조약, 즉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1996년 9월 10일 폐기하였다. 대신 러시아는 군사동맹이 배제된 신조약인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을 2000년 2월 9일 북한과 체결하였다. 셋째, 북한의 상황을 극심한 경제 및 식량 위기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당 총비서 및 국방위원장 재취임 이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남북한과의 균형관계 발전을 중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러시아 정부는 6월 14일 외무부 대변인 공식성명을 통해 “진정한 남북한문제 해결을 향한 움직임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강화할 것이며 이는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되는 것”<sup>24)</sup>이라고 밝혔다.

22) V. P. 뜨까첸꼬,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이해관심”(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와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공동주최 제9차 한·러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8. 10. 22~23), p. 1 & p. 5.

23) 파노프 전 주한 러시아대사 인터뷰 내용 참조. *Defence News*, January 25~31, 1993, p. 38.

24) “Moscow Hopes P’ongyang Summit Will Help Korean Reconciliation,” FBIS-EAS-2000-0614.

## (2) 한반도 비핵화

러시아는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접경지역에 핵이 없는 상황을 국익과 연결시키고 극동지역의 안정 및 핵의 수평적 확산 방지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1991년 11월 한국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동년 12월 남북한 간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및 1992년 1월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 등 일련의 조치들을 한반도 비핵화정책에 대한 중대한 진전으로 간주한 바 있다.<sup>25)</sup> 러시아 정부는 구소련 시대의 정보들을 기초로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 확보와 핵 보유국으로서의 등장을 위하여 김정일 지도하에 핵개발에 착수하였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북한 핵문제가 노정되었을 당시, 러시아는 북한이 1990년경 핵 기폭장치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이 사실의 은폐를 위하여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으며, 플루토늄 추출상의 문제 등으로 완전한 핵개발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대미 수교 및 체제를 인정받기 위한 협상카드로 핵문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sup>26)</sup>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필요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경우 어떠한 핵무기라도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지역불안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핵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완전 동결시켰고<sup>27)</sup> 1992년말 모스크바 공항에서 북한으로 탈출하여 핵기술을

25)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5 February 1992, p. 38.

26) "KGB Document Reveals DPRK Nuclear Potential," FBIS-SOV-94-122 (24 June 1994), pp. 11~12; 『한국일보』, 1992. 7. 30.

27) George F. Kunadze, "Security and Economic Situa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with Emphasis on North Korea" (a paper presented for the 9th IFANS-IMEMO Conference on

이전하려던 30명 이상의 러시아 과학자들을 체포하는 등 자국 핵과학자와 핵연료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북한이 핵개발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수락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양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미국 등 서방과 공조 체제<sup>28)</sup>를 유지함으로써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 합의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현재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제네바 기본합의문」으로 다소 동결되었으나 북한은 이미 1~2개 핵폭탄 제조를 위한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한 상태에서 연구와 개발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sup>29)</sup>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재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1996년 여름 미 의회가 대북 중유제공 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해 핵동결 의무를 재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북한에 경수로 지원과 중유 공급을 약속한 것은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흑연감속로의 가동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 같은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 의회가 예산삭감을 결정하더라도 클린턴 대

---

“Korean-Russian Cooperation at the Turn of the Century,” Seoul, October 28~29, 1999), p. 4; 트카첸코, “러시아-북한관계의 변화와 양한관계 영향,” (한양대 중소연구소 세미나, 1993. 5. 24), 「주요자료 전문집」 (연합통신, 1993. 6. 1), p. 104.

28) 1992년 6월 엘친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공동성명」, 1993년 3월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시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6개국 긴급회담의 개최 제안, 동년 10월 엘친 대통령의 방일시 호소카와 일본 총리와 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대한 강한 우려 표명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29)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제Ⅲ장, 2. 정체기, 나. ‘핵·미사일 문제의 갈등’ 참조.

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천명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가 북한의 식량지원에 나서고 있는 점을 들어 “세계공동체와 대립해서는 안되며 주변 세계와 문명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30)</sup>

### (3) 남북한과의 경제관계 발전

경제난 극복과 외국의 투자 유치를 통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에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러시아 정부는 남북한과도 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8월 17일 대외채무 지불유예, 즉 모라토리엄 선언 등 러시아의 경제침체와 한국의 IMF 사태 및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교역규모는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 8억 5,910만 달러로부터 점차로 증가하여 1996년 37억 7,780만 달러까지 신장되었으나 1997년 32억 7,150만 달러, 1998년 21억 1,240만 달러로 감소되었다. 1999년에는 22억 2,750만 달러로서 1998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러시아 정부가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성과는 크게 미흡하다.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가 처음 이루어진 1989년 이래 2000년 7월까지 행해진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는 총 102건으로 총투자 금액은 1억 5,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동 기간중 행해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중 건수로는 0.98%, 금액면에서는 0.56%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이는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금액 45억 1,000만 달러의 1/30에 불과하다.<sup>31)</sup> 특히 러

30) 『러시아방송』, 1996. 7. 3.

31) 이창재, “제2차 한·러포럼 발제문: 한·러 경제협력의 나아갈 방향” (한국

시아 정부는 모라토리엄 선언이후 한국기업들의 철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sup>32)</sup>

<표 1> 남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교역실적

(단위: 백만 달러)

	대 한 국			대 북 한		
	수 출	수 입	계	수 출	수 입	계
1990	369.7	519.1	888.8	701.5	440.5	1,142.0
1991	577.3	625.1	1,202.4	193.7	171.0	364.7
1992	494.5	364.6	859.1	227.1	65.2	292.3
1993	974.8	601.2	1,576.0	169.0	54.0	223.0
1994	1,229.7	961.9	2,191.6	51.4	43.7	95.1
1995	1,892.9	1,415.9	3,308.8	70.1	15.3	85.4
1996	1,810.3	1,967.5	3,777.8	35.8	29.0	64.8
1997	1503.6	1,767.9	3,271.5	73.5	17.2	90.7
1998	998.6	1,113.8	2,112.4	66.9	17.0	83.9
1999	637.0	1,590.5	2,227.5	75.1	24.6	99.7

주: 1990년과 1991년은 구소련의 남북한에 대한 교역실적이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와 「구주경제」; ロシア東歐貿易會, 「ロシア東歐貿易 調査月報」 등.

러시아 정부는 한·소 수교이후 악화되었던 관계의 회복과 노동력 이용 차원에서 북한과도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북한 경제목표는 ① 러시아 극동지역에 북한 별목공들과 기타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 ② 러시아 완제품을 대가로 북한

국제교류재단 주최 제2차 한·러포럼 발표논문, 2000. 9. 29), p. 1.

32) *The Korea Herald*, September 24, 1998, p. 8.

의 가치있는 원자재를 구매하는 것, ③ 구소련 시대에 건설된 북한내 기업들의 현대화에 참여하는 것, ④ 북한에 대한 핵원자로의 향후 이전과 북한 자유경제지역 발전에 관여하는 것, ⑤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야쿠티아로부터 한국으로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 한·러 간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것 등이다.<sup>33)</sup> 러·북간 교역은 1992년에 2억 9,000만 달러에 달하였으나 양국의 경제난과 러시아의 대북한 경화결제 요구 및 한국중심 정책 등으로 1996년에는 6,480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양국의 경제관계 회복 노력으로 1997년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1998년 러시아의 금융위기로 약간 감소된 이후 1999년에는 약 1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 (4)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

러시아는 현재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한반도문제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내 한반도문제 관련 다수의 고위관리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경제위기에 처해 있으나 단기적으로 1980년대 말의 동구에서와 같은 근본적인 대내적 정치변화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근거로서 약 20여명의 김일성 친인척들이 김정일 체제의 안전을 위해 당·정·군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 북한에는 조직적인 체제 저항세력이 없다는 점, 북한은 ‘잔인할 정도로’ 통제된 사회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먼 장래의 일로 간주하고 있다.<sup>34)</sup> 이와 같은 배경과 한반도 안정

33) "Russia's Policy towards the DPRK"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3.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3.txt), p. 2.

34) "이그나텐코 러시아 부총리 인터뷰," 『조선일보』, 1996. 4. 15; Kounadze "Russia's Foreign Policy in Evolving World and Prospects of Russia-Korea Relationship," p. 165; Vladimir Miasnikov, "Russia



유지라는 차원에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을 존중하고 남북대화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였고, 남한에 대해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통일준비를 위하여 북한과 대화를 지속할 것을 희망하였다.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발표된 이후 그 준비과정을 주시해 오던 러시아 외무부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자 “적어도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의 가능성이 있고 양측에 의해 조정된 민족화해의 원칙을 기초로 장차 통일의 가능성이 있을 것<sup>35)</sup>”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관련, 로쉬코프(Losyukov) 외무차관은 남북한이 상호편견과 불신을 극복하고 경제적 상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가 한반도문제 해결과 남북대화 증진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히는 한편, 종전과 같이 6자회담을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sup>36)</sup>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문제가 국제적으로 본격 논의되는 경우,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에 적극 개입할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통일한국이 아·태지역의 정치·경제적 강국으로 부상하더라도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가 되고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극동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37)</sup>

---

in the New Concert of East Asian Powers” (a paper prepared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New Asian-Pacific Era and Korea”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ugust 20~21, 1992, Seoul, Korea), p. 18; Alexander Zhebin, “North Korea after Kim Il-Sung: Hard Choice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VII, no. 1 (Summer 1995), p. 213 & p. 227. 등 참조.

35) “Moscow Hopes P’ongyang Summit Will Help Korean Reconciliation,” FBIS-EAS-2000-0614.

36) “Russia Ready To Participate in Consultation on Korean Settlement,” FBIS-SOV-2000-0615.

37) Vadim P. Tkachenko,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Korea and

### Ⅲ. 러·북관계 변화추이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유신통치’가 시작된 1994년 하반기부터 2000년 하반기 현재까지 러·북관계는 1961년의 군사동맹조약이 폐기된 1996년 하반기와 신조약 『러·북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이 체결된 2000년 전반기를 기준으로 관계재정립 모색기(1994년 하반기~1996년 하반기), 정체기(1997년 전반기~1999년 하반기), 재정립기(2000년 전반기~현재)로 그 변화를 특징지을 수 있다.

#### 1. 관계재정립 모색기(1994년 하반기~1996년 하반기)

러시아는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약 2년 동안 1990년 한·소 수교이후 악화되어 온 대북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기반을 정치, 안보·군사, 경제 면에서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는 1994년 10월 미·북간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미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 가능성이 또한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러·북 양국은 새로운 경제관계의 발전에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북한은 러시아의 언론과 대한민국 무기수출에 대한 불만 및 1996년 러시아 대선에서 주가노프 공산당 당수의 집권에 대한 기대 등으로 1996년 하반기까지 대러관계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

the Russian Position” (a paper prepared for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pp. 7 & 11 참조.

### 가. 러시아의 김정일 정권 지지와 북한의 불만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직후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상황의 급격한 변화 방지와 북한체제의 안정보장을 위한 주변국들의 분위기 조성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았다. 동년 7월 10일 옐친 대통령은 김일성 사망과 관련 깊은 조의를 표명하였고,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 지도부의 교체가 양국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양국간 선린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sup>38)</sup>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은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동북아 세력균형이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경우 자국의 국내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는 한반도 안정이라는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기조와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이라는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기조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시급한 과제는 김정일 정권의 확고한 대내통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고 러시아 등으로부터 정권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한편 러시아는 ① 당시 권력엘리트들과 사회전체의 보수적 경향, ② 실용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유라시아 외교노선, ③ 미국의 대북 접근에 따라 약화된 영향력 회복 모색, ④ 경제적 이해 등으로 북한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sup>39)</sup>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소외되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국제적 지분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던 러시아는 미·북간 핵타결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대북관계를 일정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은 러·북 간의 이해일치로 옐친 대통령 특사 파노프(Panov)

38) 『모스크바 방송』, 1994. 7. 10.

39) “Russia’s Policy towards the DPRK,” pp. 1~2.

외무차관과 이인규 북한 외교부 부부장 간의 회담이 동년 9월 20~24일 평양에서 개최되어 양국관계 강화방안이 모색되었다.

양국 차관회담에서는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는 김정일에 대한 열친 대통령의 구두메시지가 전달되었고, 북한측도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러·북관계를 증진시킬 의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이 외에도 러시아형 경수로 지원, 경제협력 및 교역 증진, 양국 교류 활성화 등 광범위한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러·북 외무부 간의 교류안이 승인되는 등 정치적 대화가 활기를 띠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치적 대화를 계속 갖기로 합의하였다.<sup>40)</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북한에서 대안 없는 후계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김정일을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인정하게 되었다.<sup>41)</sup> 또한 러시아 외무부는 동년 10월 12일 대북한 수교 46주년을 맞아 북한과의 이념에 구애되지 않는 새로운 관계수립을 강조하면서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대북관계 개선 추진의사를 밝혔다. 러·북관계가 공인된 국제원칙에 대한 상호존중 원칙, 주권·내정 불간섭, 사회제도 선택의 자유권 등을 기조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양국이 선린관계, 호상보완적 연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만족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양국은 앞으로도 모든 방향에서 본격적으로 관계를 증진시킬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러·북 양국이 관계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으로서는 ‘정치적 대화의 추진’이 제기되었으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국제회의의 개최 제안이 미·북간 제네바 합의를 앞두고

40) “Deputy Foreign Minister in DPRK Talks,” FBIS-SOV-94-185 (23 September 1994), p. 14.

41) *Izvestiya*, 1994. 9. 28.

되풀이 되었다.<sup>42)</sup>

북한 『중앙통신』은 동년 10월 18일 보도를 통해서 러·북관계가 쌍방의 성실한 노력에 의해 개선되고 있다고 보도하는 한편,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옛 소련 시대의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힌 파노프 차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 러시아의 이같은 입장이 “시대의 흐름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하였다.<sup>43)</sup> 북한은 또한 동년 10월 3~5일 지리노프스키(Zhirinovskiy) 러시아 자민당 당수를 평양으로 초청하여 쌍방 당활동에 대한 통보, 두 당 사이의 친선관계 발전, 상호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북한 노동당과 러시아 자민당 간의 친선협력 증진문제를 토의함으로써 비정부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접촉을 확대하였다.

러시아와 북한은 정치적 대화의 지속에 합의하였으나 1995년도에는 양국 간에 고위인사 교류가 거의 없었고 단지 상대방 기념일에 축전 등을 보내 우의를 다지는 정도이었다. 이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 준고위급 회담 개최 등 미·북관계 진전,<sup>44)</sup>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조약을 대체하는 신조약 제시와 언론에 대한 북한의 불만, 여름 대홍수로 인한 북한의 경제난 가중 등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판문점에서 정진협정의 준수를 감시하던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을 1995년 2월 철수시킨 것과 관련, 러시아의 국영 『모스크바 방송』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진행하며 한·미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는 북한의 의도에 따른 것”<sup>45)</sup>이라는 시각의 보도를 하였다. 동년 7월 6일 북·소 동맹조약 체결 34주년을 맞아 양국은 상대국 주

42) 『내외통신』 종합판(54) (1994. 10. 1~12. 31) p. 174~175.

43) 『내외통신』 종합판(54), p. 175~176.

44)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 1995~1996』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56~61 참조.

45) 『모스크바 방송』, 1995. 3. 1.

재 대사관에서 각각 연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동맹조약의 폐기 또는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양국은 종전과 같은 기념행사가 아니라 간소한 연회를 마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년 8·15 해방 50주년을 맞아 엘친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보낸 축전에서 소련군의 ‘해방자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는 미·북 접근에 대한 러시아의 견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한·소 수교이후 8·15 해방과 관련한 소련군의 역할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나 8월 15일 함흥시 해방탑에서 김영남 외교부장, 김복신 부총리, 파데예프(Fadeyev) 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련군 묘지에 헌화하고 추모의식을 진행하는 등 러시아와의 우의를 표시하였다.<sup>46)</sup> 또한 엘친 대통령은 동년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 47주년을 맞아 양국의 유대관계 강화를 강조하는 축전을 김정일에게 보냈다.

1996년도에는 북한측보다는 러시아측에서 양국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책동에 따른 한반도 긴장의 완화 필요성, 4자회담에서의 소외와 미·일 신안보체제 형성에 대한 대비책 강구, 북한과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의 모색 등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동년 2월 14일 북한 사회안전부 보안요원으로 추정되는 25세의 조명길 하사가 무장한 상태에서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난입하여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난입과정에서 북한 경비병이 사망하였고 망명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러·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그가 형사범들을 상호 인도하기로 한 1957년 양국 조약에 따라서 북한 당국에 인도됨으로써 외교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그가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46) 『평양방송』, 1995. 8. 16.

또한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참사관이 「이타르-타스」(ITAR-TASS) 통신사를 방문하여 난입자가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러한 말은 북한인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항의하였다.<sup>47)</sup>

소련 붕괴이후 최고위급 러시아 정부대표단이 러·북 정부간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그나텐코(Ignatenko) 부총리의 인솔하에 4월 10~12일 평양을 방문하였다. 그는 이종욱 부주석을 만나 북한과 제반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김정일에 대한 엘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러시아 대표단의 파노프 외무차관은 김영남 외교부장과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 등 상호 공동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인규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 정치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협상에서 양측은 러·북 관계를 새롭게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실현 방법 및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책동으로 한반도에서의 상황악화를 우려한 러시아측은 남북한이 자제력을 보이고 관련국들의 협상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한 반면, 북한측은 제3국이나 어떠한 중재자도 없이 단지 미국과의 대화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48)</sup>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초청으로 셀레즈노프(Seleznev) 러시아 연방하원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규모 의회대표단이 동년 5월 26~29일 평양을 방문하여 황장엽 당비서, 홍성남 부총리, 이종욱 부주석, 김영남 외교부장 등 북한의 고위간부들과 만나 국제문제와 한

47) "Russia: Reporter Accused of 'Slander' in DPRK Defector Case," FBIS-SOV-96-033; 『내외통신』, 종합판(59) (1996. 1. 3~3. 30), p. 129~130.

48) "Russia: Panov, DPRK 'Differ' on Ways To Reduce Tension on Peninsula," FBIS-SOV-96-073; 『내외통신』, 종합판(60) (1996. 4. 1.~6. 30), p. 90.

반도 정세 및 양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의회간 관계 증진에 합의하였다. 이 당시 김정일은 3년상을 이유로 외국 손님들과 접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쉘레즈노프 하원의장의 면담을 거부하였다.<sup>49)</sup> 4월 16일 한·미 정상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4자회담을 제의하였고, 다음날 미·일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유사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신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따라서 러시아 의회대표단의 방북시에는 4자회담과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정일의 유훈통치 시기에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명백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붕괴의 가시적인 표시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규모 이념적 세뇌와 결합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당과 행정부의 통제와 지도층으로 하여금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다. 북한내 최고 권력층과 사회에 대한 상황 분석은 북한 정권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힘을 축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적 곤란이 이념적, 군사적, 안보적 조치들에 의해 중화되어 왔다. 정권의 즉각적인 붕괴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이르다.”<sup>50)</sup>

이와 같이 북한이 경제난을 겪고 있으나 정치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연방하원인 국가두마 지정학문제위원회 주최로 국회청문회가 1996년 6월 4일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러시아 국회의원들과 한반도문제 학자, 외교관, 군사전문가 및 모스

49)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txt), p. 2.

50) “Internal Situation,”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txt), p. 1.



크바 주재 북한대사 손성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3시간 동안 한반도 정세와 러·북관계 문제를 총괄적으로 토의하였다. 청문회 결과 급속히 첨예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해소하고 러·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과 러·북간 의원연맹 창설 문제 및 야쿠티아~평양~서울 간 대규모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계획 등이 제기되었다. 지정학위원회는 남북한과 동등하고 균형된 관계를 유지하려는 지난 2년간의 정책이 러시아의 국익에 상응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만 러시아와 극동지역 기타 국가들의 안보가 보장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1991년 이후 러·북관계 악화, 북한과의 관계 증진에 대한 외무부의 수동적인 태도, 4자회담에 반대하지 않는 러시아 외교, 핵문제에 대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 등을 비난하는 한편, 대북 군사무기 판매의 재개를 주장하였다. 특히 미트로파노프(Mitrofanov) 위원장과 그의 측근 인사들은 한국과의 경협을 가치없고 무익한 것으로 묘사하고 서울이 러시아를 2류 국가로 취급하면서 모욕하고 더럽히고 있다고 한국의 대러정책을 격렬히 비판하면서 한국이 러시아를 더 존경하도록 하기 위해 러시아가 강한 행동으로 한국을 경고 위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1)</sup>

엘친 대통령은 1996년 6~7월 실시된 러시아 출범이후 최초의 대선에서 승리하였고 재취임 직후인 8월 12일 주북한 대사 파데예프의 후임으로 외무부 아주국 부국장 데니소프(Denisov)<sup>52)</sup>를 임명하고 대

51) "Russian State Duma Discussions on the Korean Problem,"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txt), pp. 4~5; 『내외통신』, 종합판(60), p. 57.

52) 데니소프 북한주재 대사는 1941년 생으로 1970년 모스크바 국제관계 대학을 졸업하고 평양 대사관에서 15년간 근무하였고 1991~1993년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의 고문을 지내는 등 북한에 정통한 외무관료이다.

북관계 개선을 도모하였다. 또한 엘친 대통령은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 48주년을 맞아 김정일에게 “러시아와 조선이 쌍방의 노력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합되게 진정한 선린관계를 수립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sup>53)</sup>는 축전을 보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러시아의 대북관계 재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러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연방하원 의장 셀레즈노프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의회대표단이 5월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은 러·북관계 발전에 객관적인 장애는 없으나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북한 및 그 지도자들을 모욕하는 러시아 언론기사들과 한국으로의 러시아 군사무기 수출<sup>54)</sup>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또한 김영남은 이 때문에 러시아 정부가 1995년 8월 제시한 신조약 초안의 검토를 연기하였고 신조약 체결을 위한 조건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동맹관계 유지에 큰 이해가 있는 북한이 러시아에서의 6월 대선 결과를 기다렸다가 만약 공산당 후보 주가노프가 승리하는 경우 1961년 군사동맹 조약의 연장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하였다.<sup>55)</sup>

이와 같이 러·북간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대러관계에서 정부차원보다는 당과 민간차원에서의 관계 발전을 도모하였다. 북한 노동당은 엘친 대통령에 반대하는 친공산계 극우보수 성향의 정치조직인 『민족구국전선』 대표단의 1996년 8월 12일 평양 방문시 이들과 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북한은 자신이 재정지

53) 『내외통신』, 종합판(61) (1996. 7. 1~9. 30), p. 129.

54) 1996년에 러시아는 경협차관 상환차원에서 T-80U 전차, BMP-III 장갑차, METIS-M 대전차유도탄, IGLA 지대공 미사일 등 1억 5,0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한국에 제공하였다.

55)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p. 2.

원을 하고 모스크바 대학, 「러시아 국가경영아카데미」, 「국제주체사상연구소」, 국제적인 과학자학회인 「현대세계인」이 공동후원하는 주체사상에 관한 대규모 회의를 9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황장엽 당비서, 손성필 주러시아 북한대사, 러시아의 친공산계 연구가들과 러시아공산당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30여국으로부터 300여명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참석하였는데 이들은 주체사상과 그 창시자이며 후원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을 극도로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다.<sup>56)</sup> 또한 러시아 정당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를 확대를 하고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은 12월 17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여러 정당, 단체와 과학 출판 보도부문 대표들이 참가하고 「러시아과학원 사회정치문제연구소」 부소장 알렉산드르카프토가 위원장을 맡는 「조선과의 연계를 위한 러시아 사회계 위원회」라는 친북단체를 새로이 결성하였다.

#### 나. 동맹조약의 폐기와 군사협력 지속

1961년 체결된 동맹조약과 관련, 1990년대 전반기에 러시아는 1996년 9월 10일까지 유효한 이 조약을 계속 유지하되 제1조 자동군사개입 규정을 새롭게 해석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즉 러시아는 “북한에 의하여 도발되지 않는 침략의 경우 동 조항에 의거,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 이행의 의무가 있다”<sup>57)</sup>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1995년 8월 7일 북한에 새로운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초안을 전달함으로써 양국간 군사동맹 관계는 1996년 9월 10일부

56) “Russian Followers of Juche Ideas”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3.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3.txt), pp. 5~6.

57) *Izvestiya*, 1992. 8. 13.

로 종식되었다. 그러나 군인사 교류와 북한측에 대한 러시아로부터의 군사무기 부품의 공급 등 군사교류와 협력은 지속되었다.

1994년 6월 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엘친 대통령은 자동개입을 규정한 동맹조약 제1조가 사실상 사문화되었음을 밝혔다.<sup>58)</sup> 『모스크바 방송』도 조약체결 33주년을 맞아 7월 5일 소련 붕괴와 냉전종식 등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의 현저한 변모 등으로 일부 조항이 현실성을 상실했다고 밝히고, 특히 사회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공동의 이해증진 조항과 군사관련 조항이 그에 해당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엘친 대통령과 러시아 일부에서 표명된 상기와 같은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현실성 상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 특히 외무부의 공식입장은 종전과 같이 북한과의 방어적 군사동맹 관계가 조약 만료때까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9월 파노프 외무차관의 방북시 이 조약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는 방북 이후 Moscow Interfax와의 회견에서 “우리는 문제해결을 위한 1년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평양에 대한 군사원조 규정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침략의 목표가 될 때 단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며, 침략의 본질은 모스크바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sup>59)</sup>라고 밝혔다. 북·소 동맹조약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대한 러시아의 상기와 같은 이중적인 태도는 자국을 둘러싼 남북한 간의 경쟁관계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 정부는 기한 만료 1년 전에 조약폐기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동맹조약 제6조 규정을 고려해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하여 1995

58) 『조선일보』, 1994. 6. 3.

59) “DPRK Said To Favor Russian Nuclear Reactors,” FBIS-SOV-94-188, p. 9.

년 8월 7일 신조약 초안을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이는 동맹조약이 양국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자국의 실정과 러·북관계 상황 및 동북아 정세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최종적인 결론을 러시아 정부가 내렸기 때문이었다. 즉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러시아는 분쟁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지원을 할 의도가 없는 것이다. 이 조약의 수정에 반대해 왔던 북한도 30년 전에 체결된 동맹조약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고 인정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조약안을 검토·분석할 용의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sup>60)</sup>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러시아 언론과 러시아 정부의 대한민국 무기수출에 대한 불만 및 1996년 러시아 대선에서 주가노프 공산당 당수의 집권에 대한 기대 등으로 동년 중반까지 신조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후 북한측의 반응이나 동맹조약이 만료되는 9월 10일 러시아 외무부는 “군사동맹 조항을 담고 있는 기존의 소·조 우호조약은 폐기되고 현재 대체조약 체결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러·북간 군사동맹조약이 폐기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고립화와 체제위기 의식을 심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었다. 반면 탈이념화의 추세에 따라서 주변 4국과 남북한 관계가 보다 실리추구적으로 재편되어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도 촉진시키게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평가되었다. 신조약은 동북아의 정치현실을 반영하여 선린우호관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상호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사회제도 선택의 자유 등 공인된 국제원칙에 따른 기본조약으로 1992년 체결된 『한·러 기본관계조약』이나 1994년 체결된 『러·베트남 우호협

60) *The Korea Times*, September 7, 1995, p. 1; 『모스크바 방송』, 1995. 9. 8.

정」이 그 모델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북한식 통일방안의 표현여부와 「러·베트남 우호협정」 3조와 같은 “안보위협 상황 발생의 경우 즉시 상호접촉” 규정의 포함여부가 국내외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sup>61)</sup> 구소련 공화국들 이외에는 타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념과 군사동맹이 배제된 새로운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여 북한과 보편적인 선린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냉전종식 이후의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에 적극 대처하고 균형된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기와 같이 러·북간 동맹관계는 폐기되었으나 양국 사이에는 1992년 체결된 협정을 기초로 국방부 대표단의 상호방문이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1994년 6월 한·러 정상회담시 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무기부품 공급과 판매를 완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그 직후 코지레프(Kozyrev) 외무장관은 “최근 북한에 판매된 군사무기 부품은 없으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sup>62)</sup>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군사무기 부품의 공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는 북한도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 상업적 이익에 기초하여 극동에서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방어용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무기들의 북한내 공동생산과 일부의 수출을 제의받았으나, 러시아는 현금지불을 요구했고 북한은 차관을 요청했기 때문에 회담에 진전이 없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3국으로부터 첨단무기들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강화하

61) 「내외통신」, 종합판(61), p. 126.

62) “An Interview with Russian Foreign Minister Andrei Kozyrev,” *RFE/RL Research Report*, vol. 3, no. 28 (15 July 1994), p. 37.

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북한은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군사무기를 제공한 점을 우려하여 인도, 중국, 파키스탄, 이란 등으로부터 러시아의 Buk-MI·Top-MI·Tunguska 방공체계, S-300 미사일 방어체계, 2S19 Msta-S 곡사포, Kilo와 636 Amur급 잠수함 등 첨단 군사무기와 그 샘플들을 획득하고자 노력하였다.<sup>63)</sup>

#### 다. 경제관계의 회복 모색

러시아 정부는 한·소 수교이후 악화되었던 관계와 경제·무역관계의 회복차원에서 북한과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 시기에 양국 교역량은 감소되었으나 정부간 협력의정서가 조인되는 등 경제관계가 제도적으로 정비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간에 경제관련 인사들의 상호방문을 통해 경험증진 방안도 활발히 논의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미·북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대북 경수로 공급에 강한 이해를 나타냈으며 대홍수를 겪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였다.

파노프 외무차관이 1994년 9월 김정일에 전달한 구두메시지에서 엘친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도모하는데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북한과의 무역·경제 관계를 새롭게 고찰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하였다. 파노프 외무차관은 이인규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에서 「이중과세방지 협정」과 「투자보장 협정」 등 수정되어야 할 양국간 협정 목록을 제시하였고 양측은 이 문제의 해결에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러·북간 무역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

63) "Russia's Policy towards the DPRK," p. 4; "Arms procurement in the DPRK"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4.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4.txt), pp. 4~5.

라서 러시아는 “러시아와 조선에서 (무역량이) 1억 달러라는 수준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무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sup>64)</sup> 이에 따라서 러·북 양국은 10월 평양에서 소련 붕괴이후 처음으로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sup>65)</sup>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0월의 러·북간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회의에서는 양국 현안인 외채 문제,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제, 동맹조약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김일성 사후 체제 공고화 작업과 경제난 등 양국의 사정으로 개최되지 못하였다.

이 회의는 1996년 4월 10~12일 이그나텐코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정부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쌍방간 교역을 확대하고 이미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간 잠재력을 가동시킬 새로운 협력 방침을 모색하자는 내용의 강성산 총리에게 보내는 체르노미르딘(Chernomyrdin) 러시아 총리의 친서가 전달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양국간 무역통상 규모와 합작투자액의 확대, 46억 달러의 북한 채무, 기술원조 등의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무역, 경공업, 임업, 채취공업,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정서가 홍성남 부총리와 이그나텐코 부총리간에 조인되었고, 쌍방간 경제무역 협력을 지난 1991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되었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두 나라 사이의 이해를 도모하고 쌍무관계를 여러 분야에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됐다고 주장하였다.<sup>66)</sup> 이 시기에 러·북간 교역액은 1994년 9,510만 달러에서 1995년 8,540만 달러로 감소되었고

64) 『모스크바 방송』, 1994. 9. 26.

65) 이 회의는 원래 1992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다.

66) 『러시아 방송』, 1996. 4. 11; 『내외통신』, 종합판(60), p. 93~94.



1996년에는 6,480만 달러로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연간 대북한 교역량이 1억 달러 이하로 격감됨에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1996년 9월 평양 주재 무역대표부를 폐쇄하였다.<sup>67)</sup> 양국의 교역 부진은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 미해결, 양측의 만성적인 외환부족, 북한 무역회사들의 빈번한 계약 불이행 및 러시아의 철도운송료 인상 등 교역환경의 경색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간의 경험증진 방안도 논의되고 합의되었다. 한수길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부문의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대표단이 1994년 11월 중순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해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기업과 합영기업소들의 활동을 관장하게 될 『정무원대표부』를 1995년 초에 블라디보스톡에 개설하기로 하는 등 쌍방간 경제협력문제와 관련한 주요한 합의를 이루었다. 특히 러시아측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여 그 동안 물물교환 방식 등으로 이루어졌던 쌍방간 교역은 외화결제 방식으로 결정되었다.<sup>68)</sup>

북한과의 경험 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라첸코(Lazchenko)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1995년 3월 21~24일 주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해 홍성남 부총리를 비롯한 북한의 고위 경제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관세와 국경선 문제, 경제·무역의 증진문제를 논의하였으며 농어업과 기계제작 등 분야의 쌍방간 협력각서를 조인했다. 그는 “러시아와 조선은 쌍무 통상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인위적인 장벽들을 허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양국간 해상법, 관세법, 출입법 등을 일체화시킬 조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sup>69)</sup>

67) “ROK: Daily: Russia Closes Down Trade Mission in Pyongyang 10 Sep,” FBIS-EAS-96-179, p. 1.

68) 『모스크바 방송』, 1994. 11. 24.

투자분야와 관련하여,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설치한 지 3년만인 1994년 8월 러·북 양국의 최초의 합작무역회사인 자본금 1억 루블 규모의 『조·러 상업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나 북한의 정치적 폐쇄성, 사회간접시설 및 에너지 부족 등 투자여건 미비로 큰 실적을 거두지 못하였다. 양국은 쌍방간 투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6년 11월 28일 5년 기한이며 연장이 가능한 『자본투자 장려와 상호보호조약』을 모스크바에서 체결하였다. 러·북 간에는 약 40개의 합작기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조약을 통해 양국은 국제법적 수준에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협력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손성필 주러시아 북한대사는 “우리 나라에는 소련 시기에 소련의 기술과 설비에 의해 건설된 많은 큰 공장들이 있으며 이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와 기술재건을 위한 분야에서 두 나라가 얼마든지 많이 협조할 수 있는 가능성과, 나진-선봉에서의 투자, 수송 및 기타 공사분야에서의 많은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였다.<sup>70)</sup> 러·북 양국은 『자본투자 장려와 상호보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협력관계를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1996년에 북한과 다수의 협정과 양해각서들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관한 것이었다.

- 소련 원조로 과거에 건설된 북한 기업과 러시아 기관들 간의 협력관계 활성화(김책 야금공장, 자동차 배터리 공장, 극소전기 엔진을 생산하는 기업들)
- 북한 마그네사이트 광상의 공동 개발

69) 『모스크바 방송』, 1995. 3. 24; 3. 31.

70) 『러시아 방송』, 1996. 12. 3; 『내외통신』, 종합판(62) (1996. 10. 1.~12. 31), p. 154~156.

- 야쿠티아 석탄광상의 공동개발
- 러시아 극동에서 벌목과정의 정상화
- 러·북간 화물선 해운로의 재개
- 북한을 관통하는 야쿠티아~한국간 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
- 러시아에 대한 북한 채무의 상환
- 양자 교역에서 청산과 구상 방법의 창설
- 공동투자 기업의 설립(약 40개 있음)
- 러시아 농업, 건설, 광산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이용
- 북한에 건설된 구소련 기업들의 기술적 현대화.<sup>71)</sup>

이 시기에 투자분야에서의 협력은 러시아 연해주 지방과 북한 간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중앙정부의 지원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 호응하였다. 특히 사할린주가 대북한 경제협력에 적극성을 보였는데, 이는 1994년 10월 북한의 동해와 서해에서 석유·가스 개발 가능성이 확인된 이후 북한측이 사할린주에 관련 장비와 기술자를 요청하는 대가로 소비재, 비철금속, 중장비 등을 세계시장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사할린의 특산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었다.<sup>72)</sup> 이에 따라서 각 부문의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대표단이 11월 중순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양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지역에 경공업, 조선, 석탄채굴, 주택건설 등을 추진할 합영기업을 설립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고 협조의정서와 협정을 조인하였다. 또한 북한 대표단은 사할린에서 주대표단과 공동어업 문제에 합의했으며 아무

71) "Russia's Policy towards the DPRK," p. 4.

72) 『한겨레신문』, 1995. 1. 29.

르주와 유태인 자치주에서는 농업분야의 협조를 강화하는 것과 과학  
부문의 협력을 구소련 시기때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합의하였  
다.<sup>73)</sup>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도 북한을 방문해 3월 22일 홍성남 부총  
리와의 회담시 러시아측은 에너지, 어업, 조선, 관광, 건설 분야에서  
북한과 합작사업을 추진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러시아는 이 시기에 북한측에 러시아형 경수로를 지원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새로운 임업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수해로  
인한 식량난을 겪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였다. 파노프 외무차관  
은 1994년 9월 방북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러시아형 경수로를 지  
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제네바 기본합의문』 채택이후 베를린에  
서 개최된 대북 경수로 제공을 위한 미·북 협상에서 한국형 경수로  
선택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못하자 러시아 정부는 이를 자국  
형 원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 아파나시예프 러  
시아 외무부 아시아담당 국장이 1995년 1월 북한을 방문하여 이인규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 만났을 때도 경수로 제공에 관해 의견을 교환  
하였다. 이 당시 북한도 러시아형 경수로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KEDO의 대북 경수로 제공에 참여하  
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96년 초에도 한국 및 미국과 접촉을 가  
졌으며 KEDO에 참여하는 문제도 검토하였다. 파노프 외무차관은  
“이 기구에서 러시아가 어떠한 무게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 후 참가문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sup>74)</sup>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 방송』은 또한 “KEDO가 아직까지 송전선 현  
대화 건설 등의 문제에서 해결을 보지 못했으며 이를 담당할 외국동  
업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러시아 정부가 송전선 설치

73) 『내외통신』, 종합판(54) (1994. 10. 1~12. 31), p. 243.

74) 『러시아 방송』, 1996. 1. 8.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1996년 3월 20일 KEDO는 한전을 경수로사업 주계약자로 공식 지정하였다.

러·북 간에는 시베리아 벌목공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들에는 합의를 보았으나 채벌목재의 지분할당 등 경제적인 이해관계 차이로 가조인 상태에 있던 새로운 임업협정이 1995년 2월 24일 평양에서 정식 조인되었다. 양국은 8시간 노동 등 러시아내 북한 벌목공들의 인권보장,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작업하게 될 북한 벌목공의 수, 이들이 생산할 원목의 배분비율, 북한의 무관세 원목 도입 등에 최종 합의한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임업협력으로 연간 약 5,700만 달러의 이윤을 얻게 되었으며, 총 7,000명의 북한 벌목공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sup>75)</sup> 그러나 동년 11월 27일~12월 1일 평양에서 진행된 양국 공동위원회 회의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내 임산사업소의 생산경영 활동이 불만족스럽게 평가되었다. 또한 벌목공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노동강요 등으로 이들의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벌목장에 관한 협정의 연장조건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개선과 대우개선을 북한측에 촉구하였다.<sup>76)</sup>

북한이 1995년 3차례의 집중호우에 따른 큰 수해를 당하자 러시아는 20만 달러 상당의 식량(쌀 20톤)과 의약품 1.5톤, 모포 3,000장을 지원하였다. 이 당시 한국이 쌀 15만톤, 일본이 쌀 50만톤, 중국이 곡물 10만톤, 미국이 옥수수 5만 4,000톤 등 국제사회는 총 110만톤의 곡물을 북한에 지원하였다.<sup>77)</sup>

75) 『내외통신』 종합판(55) (1995. 1. 3~3. 31), p. 137~138.

76) 『러시아 방송』, 1995. 12. 1.

77) 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 1995~1996』, p. 47; 『내외통신』, 종합판(66) (1997. 10. 1~12. 31), p. 200.

## 2. 정체기(1997년 전반기~1999년 후반기)

이 시기에 러시아는 동맹관계가 청산된 북한과의 관계를 보편적인 국가간 관계에 기초된 선린우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는 NATO의 동구로의 확대, 코소보 사태 등으로 유럽지역 문제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북한도 또한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계속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러·북간 정치관계의 발전은 제한적이었고, 북한의 핵 재개발 의혹과 미사일 문제가 노정됨으로써 안보·군사 면에서 갈등이 표출되었다. 또한 러시아의 경제난에 따른 1998년 8월 모라토리엄 선언, 북한의 1996년 수해와 1997년 가뭄 등으로 인한 경제난 가중 때문에 양국 경제관계에도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가. 제한적 선린우호관계

러시아의 관계재정립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한은 1997년부터는 러시아 정부와 정치적 교류를 확대하고 신조약 체결 협상에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엘친 대통령이 1996년 하반기부터 집권 2기에 들어섰고 김정일의 ‘유혼통치’로 북한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신조약 초안에 반응을 보임에 따라서 카라신(Karasin) 러시아 외무차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1997년 1월 22일 이인규 외교부 부부장과 신조약에 관해 논의하였고 쌍방간 여행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주민의 왕래가 사증제도에 의하게 되었다. 이 사증제도는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근무중인 북한 벌목공들과 기타 경제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처음으로 적용되었다.<sup>78)</sup> 1996년 5월의 의회간 상호교류 합의에 따라서 러시아 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장 루킨(Lukin)은 1997년 4월 29일~5월 3일 북한을 방문하여 김영호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및 황병대, 이동철 위원 등과 의회간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현재의 관계를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특히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에 대한 두 나라 정부간 위원회 활동을 보다 적극화하고 문화와 정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측은 러시아 언론들이 한반도 관련 보도를 객관적으로 전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측은 러시아 출판계가 이미 자유화 되었으며 기사는 필자의 견해만을 표시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한다.<sup>79)</sup> 동년 6월 3~6일에도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초청으로 러시아 국가두마 지정학문제위원회 동남아 및 아·태지역 분과위원장 모나스트리츠키(Monastyrckiy)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이며 북·러 친선의원단 위원장인 이동철 등과 의회간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친선관계 발전 및 상호 관심사를 토의하였다.

이 시기에 주목을 끄는 점은 러시아내 친평양 로비스트들의 활동이 활발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중 러시아 공산당 당원들은 북한을 이념적 동료로 보고 있고 민족주의자들은 북한을 미국과 일본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 군사적 파트너로 보면서 북한 정권의 '위대한 업적'을 칭찬하였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직접 뇌물이나 재정 지원을 받거나 북한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였다. 극우민족주의자로서 영향력 있는 러시아 정치가인 지리노프스키가 방북시 후한 대접을 받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고, 이들은 방북이후 러시아 의회나 언론

78) 『내외통신』, 종합판(63) (1997. 1. 1~3. 31), p. 162~163.

79) 『내외통신』, 종합판(64) (1997. 4. 1~6. 30), p. 111~112, 120~122.

등에서 북한을 좋게 선전하며 러시아 언론이 북한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김정일과 그의 정권을 비방하는 데 대해 공격했다.<sup>80)</sup> 이러한 영향을 받아 러시아의 공산계 당대표단이나 저명한 공산주의자들이 1997년에도 북한을 방문하였다. 북한 노동당의 초청으로 라프신(Lapshin)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농업당 대표단이 동년 9월 21~24일 평양을 방문하여 양당관계 발전과 관련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구소련 국방부 장관 야조프(Yazov), 소련공산당 중앙위 위원장 쉐닌(Shenin) 등 다수의 저명한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방북하여 3년상을 끝낸 김정일과 구소련 붕괴의 원인 및 결과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은 구소련이 1991년에 반공산주의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은 데 대해 야조프를 비판하는 한편, 고르바초프가 왜 잘못된 길을 택했는지를 계속 질문하였다고 한다.<sup>81)</sup>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의 당총비서 취임과 관련, 러시아는 아래와 같이 북한이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동독 붕괴의 경험 때문에 경제난 타개에 필요한 개혁을 싫어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김정일의 당총비서 선출은 그의 지배에 정당성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커다란 새로운 지렛대를 그에게 주고 있다. 어떤 자나 집단이 그의 지도력에 도전하기는 진보다 더 어렵게 될 것이다. 그의 당총비서 선출로 노동당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고 이는 북한의 국사가 더욱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까지 군대에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 군대와 당이라는 두 기

80) “Activities of the Pro-Pyongyang Lobby in Russia”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7.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7.txt), pp. 5~7.

81) “Visits of Russian Communists to North Korea”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0.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0.txt), pp. 1~2.



구에 기초될 것이다. 북한 지도부의 활동은 더욱 가시적이고 질서있고 명백해져서 북한을 이해하고 그 움직임과 전망을 예측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김정일이 그의 측근에 의해 도전받아 추방될 것이라는 이전의 희망은 가까운 장래에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광범한 이념화, 국가의 정치적 타성과 외부정보로부터의 고립으로 결합된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현존 체제에 계속 충성하고 있다. 연료, 탄약, 무기 부족 등의 군사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들이 경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의 도입을 급박하게 하고 있으나 김정일은 개혁을 싫어한다. 자신의 권력 기초를 침식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소련과 동구, 특히 동독에서의 공산개혁의 운명을 기억하고 있다.”<sup>82)</sup>

1998년에도 북한은 정당차원에서 러시아 공산주의자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2월초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지재룡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이 러시아에 파견되어 주가노프 러시아 공산당 당수, 라프신 러시아 농업당 당수, 쉐닌 소련공산당 중앙위 위원장 등을 방문하고 양측 정당간 친선관계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sup>83)</sup> 엘친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보낸 연례교서에서 “러시아는 대외정책 전략에 따라 조선과의 선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강조한 직후인 동년 3월 10~13일 모이세예프(Moiseev)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 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신조약 작성을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측에서는 외교부 CIS 및 동유럽담당 국장 박현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하여 러·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본조약 체결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82) “Kim Jong Il’s Regime Strengthens Its Grip on Power,”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9.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9.txt), pp. 1~3.

83) 『내외통신』, 종합판(67) (1998. 1. 1.~3. 31), p. 183.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및 의약품 지원 문제, 양국간 경제협력 문제, 남북대화 재개 문제 등도 협의하였다. 모이세예프 국장과 이인규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에서는 쌍방간 외교수립 50주년 행사 개최문제, 프리마코프 러시아 외무장관 방북 문제 등도 논의되었다.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은 1991년 셰바르드나제(Shevardnadze) 구소련 외무장관의 방북이후 7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간 신조약 체결이 단기간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측되었다.<sup>84)</sup> 그러나 1998년 내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러·북간 신조약 체결은 양측이 서두르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았다. 러시아측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아직까지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기본관계 조약이 서명되지 않고 있다. 조약 서명 과정을 어느 쪽도 강요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명백히 이 조약이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스크바는 현재 북한과의 조약보다 훨씬 중요한 걱정거리가 있다. 평양측에서는 러시아와 지금 조약을 서명한다고 해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혹은 군사적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당한 추측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조약 체결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sup>85)</sup>

동년 3월 북한은 1990년 3월부터 약 8년간 활동을 하였고 70세를 넘긴 고령인 손성필 주러시아 대사 후임에 주레바논 대사를 역임한 63세의 박의춘 외교부 부부장을 임명하였다. 북한은 통상 주러시아 대사를 당중앙위 부부장 수준에서 임명하여 왔기 때문에 박의춘의 임명은 다소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엘친 대통령은 박의춘의 신임장 접수 자리에서 “러시아가 조선과의 사이에 눈에 띄는 경제·정치관계의 저하를 극복하려 한다”<sup>86)</sup>고 밝

84) 『내외통신』, 종합판(67) (1998. 1. 1.~3. 31), p. 179~192.

85) 뜨까첸코,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이해관심,” p. 3.

힘으로써 러시아가 당시에 대북관계 복원에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러시아 연해주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3월초 주지사의 발기로 벌인 ‘대북 식량지원 모금운동’을 통해 모은 밀가루, 쌀, 설탕, 통조림 등 식량 60여톤을 1998년 5월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김정일은 3년간의 ‘유혼통치’를 끝내고 동년 8월 ‘사상의 강국, 군사 의 강국’을 우선 건설한 후 ‘경제강국’을 건설한다는 ‘강성대국론’을 내세우는 한편, 9월 5일 국방위원장에 재취임함으로써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마무리지었다. 러시아의 한 한반도문제 전문가는 김정일이 주석직이 아닌 국방위원장직에 취임한 것을 “북한이 개방에 나서더라도 외부의 영향력이나 체제 흔들기 공작에 쉽게 넘어갈 존재가 아님을 과시하고 강력한 통제하에 개방을 취하겠다는 신호”<sup>87)</sup>로 평가하였다. 이 시기까지 러·북관계는 대체로 의회의원과 정부 각 부처의 대표 수준의 접촉 및 문화, 교육, 스포츠 부문으로 관계가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접촉의 가능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북한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늠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조심해서 다루는 반면, 러시아와의 정치협력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sup>88)</sup>

동년 11월 3일 평양에서는 중·러·북한간 「두만강 국경지역 분계선 확정협정」이 조인되었다. 두만강 지역의 3국간 국경은 1860년 청과 러시아 간의 「북경조약」으로 설정되었는데, 두만강 유로의 이동에 따라서 강상(江上) 도서(島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때로는 엉뚱한 곳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따라서 그 동안 3국이 국경문제를 둘러싸고

86) 『러시아 방송』, 1998. 5. 31.

87) 『중앙일보』, 1998. 9. 7.

88) 뜨까첸꼬,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이해관심,” pp. 2~3 참조.

찾은 마찰을 빚어 왔고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3국 국경지대의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 관련국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3국의 국경위치를 정확히 확정함으로써 두만강 하류일대와 훈춘지역의 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 회담을 개최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sup>89)</sup>

러·북 양국은 3년 이상 끌어온 신조약 협상과 관련, 실무협상을 통해 이 조약을 「러·조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고,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과 이인규 북한 외무부상이 1999년 3월 17일 평양에서 마침내 이를 가조인하였다. 이는 1998년 9월 김정일의 공식집권 이후 러·북 양국이 신조약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문과 12조로 된 신조약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카라신 외무차관은 또한 백남순 외상과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및 국제적 상황에 관해 협의하고, 4자회담 협상과정에서 러시아를 참여시키는 한반도문제 논의형식의 확대 가능성과 TMD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ARF 등 다양한 다자간 포럼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지지하였다.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999년 5월말 방북하여 신조약을 정식 조인할 예정이었으나, 그의 방북은 NATO의 동구확대 문제와 코소보 사태 등으로 연기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양국 의회간 교류 합의에 따라서 홍성우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1999년 4월 2~7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 연방하원 의장과 부의장, 공산당 당수 주가노프 및 연방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대표 등과 면담을 하였다. 또한 김정일이 노동당과 소련 공산당 그리고 양국 주민들 사이의 친선관계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89) 3국간 국경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외통신」, 종합판 (70) (1998. 10. 1.~12. 31), pp. 98 & 113~118 참조.

공로로 쉐닌 소련공산당 중앙위 위원장에게 동년 5월 2일 조선인민군 상좌 칭호를 수여하는 등 북한 노동당과 러시아 좌파정당 간의 연대강화는 이 시기에도 지속되었다.

#### 나. 핵·미사일 문제의 갈등

1998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 재시도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서방측의 북한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고 강제사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동년 8월 북한의 「대포동 I」 미사일 시험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러시아는 100억 달러 이상을 소비한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제네바 기본합의문」으로 동결되었으나, 북한은 이미 1~2개 핵폭탄 제조를 위한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sup>90)</sup>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강행하였을 때 러시아의 핵 및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시적으로 동결된 핵개발 계획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논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핵개발은 필연적으로 핵실험을 요하나 북한은 아직까지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몇 년 전에 중국 영토에서 실험하고자 하였으나 중국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아직까지 핵폭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둘째, 그러나 논의 참여자의 다수는 만약 북한이 군사적 목적의 핵개발 계획을 시작했다면 「제네바 기본합의문」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북한은 단지

90) "Reaction in Russia to Hwang Jang-yop's Statements,"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6.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6.txt), pp. 1~2.

연구와 개발의 속도를 늦추었고 이를 완전히 은폐하고 있다. ‘핵 방패’가 사회주의 국가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셋째,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이 비밀 핵개발 계획을 계속 하려는 북한의 결심을 강화시킬 것 같다. 러시아 외무부의 한 관리는 북한 고위 외교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평양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으로부터 두 가지 교훈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① 거대한 국가 인도가 자신의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작은 북한은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 유념해야 한다. ② 이 국가들의 핵실험에 대한 세계의 반응은 ‘범죄자들’이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 보다는 핵 보유의 이미지를 반영함으로써 추가적인 열매를 거두어들일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넷째,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이행을 중지하겠다는 위협 발언으로 미국 및 기타 이해 당사국들로부터 더 큰 그리고 시간적으로 더 적절한 양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sup>91)</sup>

이와 같이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핵 연구와 개발을 완전히 은폐한 가운데 속도만 늦추고 있다고 추정되는 상황에서 금창리 지하시설이 다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일으켰다. 한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증거물들의 최종 분석을 미국 「국방정보국」(DIA)에 의뢰하였고 DIA의 약 6개월 간에 걸친 분석을 통해 한국과 미국 양국은 1998년 4월 평북 대관군 금창리 지역에 원자로와 플루토늄 생산시설 등을 모두 갖춘 핵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영변의 200MW급 흑연감속로를 수용할 수 있는 40만<sup>3</sup> 크기의 굴착공사와 함께 원자로 냉각용 저수지를 위한 댐공사가 병

91) “The South Asian Test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2.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2.txt),  
 p. 1.

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시설로 추정되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이 핵 연구와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추정하면서도 금창리에 지하 핵시설을 건설중일지 모른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였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긍정적인 증거들도 갖고 있지 않으며 미국 정보자료들에 의해 제공된 위성 사진들이 건설작업 이외에 어떠한 것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유사한 작업은 다양한 목적으로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북한은 도처에 지하공장, 저장시설, 도로, 통신망 등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창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계획이 군사시설일지 모르나 핵계획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러시아의 기본적 입장이었다. 러시아는 만약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하고 핵개발 계획을 재개하려고 결정했다면 기존 시설을 재가동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한 지하 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5~8년이 소요되고 북한의 재정은 고갈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러시아는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자원을 소비하는 것 이외에도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따라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것마저도 잃을 것인데 왜 핵개발을 재개하겠는가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러시아는 제네바 핵합의를 동결시켜 의회가 재정지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 의회와 행정부내 강경파들이 북한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으나, 북한은 생존문제에 여념이 없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도 핵위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다.<sup>92)</sup>

미국과 일본에서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간

92) "The DPRK's Alleged Construction of a New Nuclear Facility"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3.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3.txt),  
 p. 1.

의 대립으로 제2의 ‘한반도 위기설’이 대두되었을 때, 코연 미 국방장관은 1999년 1월 13일 도쿄를 방문하여 일본 방위청 장관과 회담시 북한이 어떤 새로운 도발을 시도한다면 힘의 행사도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를 평양에 주어야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건설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평양을 위협하는 성명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역내 정세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sup>93)</sup> 또한 이바노프(Ivanov) 러시아 외무장관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동년 1월 25일 회담시 북한 핵의혹시설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방러 중인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도 논의해 이라크 사태와 같은 군사개입에 대해 러시아측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것”<sup>94)</sup>임을 밝혔다. 아파나시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도 “압박적인 수단으로 북한 시설을 사찰하는 것은 안 된다”<sup>95)</sup>고 말해 러시아가 북한 핵 강제사찰에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행히 이 문제는 뉴욕에서 개최된 제4차 미·북간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미국은 1999년 5월에 1차, 2000년 5월 2차, 추후 의혹이 남아 있는 한 추가방문을 하기로 하는 대신 북한에 50만톤 정도의 식량과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시범농업지원사업(씨감자, 식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미 국무부는 1999년 5월 실시한 북한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북한측이 핵계획 동결에 관한 미국과의 기본합의를 위반했다고 추정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동년 6월 23일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수교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93) 『러시아 방송』, 1999. 1. 18.

94) 『중앙일보』, 1999. 1. 26.

95) 『동아일보』, 1999. 2. 1.



북한 핵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북한이 상기와 같이 핵계획 실현에 대한 향후 의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을 긴장에 묶어 두고 있으며 남한에 대하여서는 위협한 군사행동을 실행하고 있고 이러한 북한의 행동양식은 꽤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sup>96)</sup>.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북한 핵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등이 북한에 대해 군사제재를 가하거나 강제사찰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협상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다단식 「대포동 I」로 추정되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실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북한은 쏘아 올린 로켓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광명성 1호’라 명명하고 지구궤도를 정상적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 현재까지 가장 신빙성 있는 결론은 북한이 대포동 I을 추진체로 사용하여 인공위성의 발사(제1단을 「노동」 미사일, 제2단을 「스커드 C」로 하되 스커드 탄두 부분에 제3단 로켓과 소형 인공위성을 탑재)를 시도하여 궤도진입에는 실패하였으나 미사일 시험은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시험발사를 사전에 통보받지 않았고 이것이 러시아 극동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험발사 직후 무척 당황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그 발사체가 러시아의 배타적인 경제수역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려하면서 북한에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북한 관계자의 대답은 “북한은 단지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유사한 경우 미국, 러시아

96) 뜨까첸코,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이해관심,” p. 2.

및 기타 국가들이 결코 사전 경고를 하지 않았다. 북한도 예외이어서는 안 된다. 세계는 미사일을 생산하여 타국을 위협하는 권리를 갖는 국가와 이러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국가로 구분될 수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폭탄을 실험하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소국이 평화로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그런 야단법석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것이었다고 한다.<sup>97)</sup> 러시아는 이 당시 나라마다 각국이 방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자기 국익을 보호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공격용 무기가 시범되는 경우 이웃들의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실험과 관련된 완전한 정보가 없는 것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이웃 국가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북아의 공동안보 및 안전 시스템 구축과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간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98)</sup> 또한 『러시아 방송』은 1998년 9월 3일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 경제, 인도 차원의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남북한 관계를 진전시키고 있는 시기에 평양의 미사일 실험으로 관계증진이란 기회마저 무효로 되고 있다고 북한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동년 10월 5~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비공개리에 개최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1998년도 총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지역과 세계 평화·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비난하는 의장의 성명발표가 합의되었다. 이에 가장 충격이 컸던 일본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97) “North Korean Foreign Policy after the First Session of the 10th SPA”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4.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4.txt), pp. 3~4.

98) 『러시아 방송』, 1998. 9. 1. & 9. 4.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자국의 기술자들이 관여했다는 국제여론을 의식하여 처음에는 공개성명 발표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으나 결국에는 문안내용의 수정을 통해 의장성명 채택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회원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과 수출의 억제를 위해서 북한과의 접촉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sup>99)</sup> 또한 싱가포르 ARF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22개국 외무장관들은 1999년 7월 26일 한반도 관련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한·미·일 3국 외무장관들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한반도 긴장해소는 순전히 대화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의 자제를 촉구하였다.<sup>100)</sup> 한편 동년 8월 북경에서 개최된 중·러 안보관계 회의에서는 미·일의 TMD 체제를 자극하는 요인의 하나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계획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sup>101)</sup> 9월 12일 미국과의 베를린 회담을 통해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보하였을 때 러시아는 이를 “동북아시아는 물론 아·태지역 전반사태의 안정화를 내다보는 진일보”로 평가하고 “북한이 동의한 것은 이웃 나라들의 우려를 원만히 감안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며 평양의 미사일 강령이 미·일의 TMD 구상을 부추겨 주고 있을 것이라는 러·중의 우려도 풀어주고 있다”<sup>102)</sup>라는 반응을 보였다.

99) 문장렬, “북한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 『한반도 군비통제』 (1998. 12), pp. 245~246.

100) 『러시아 방송』, 1999. 7. 27.

101) 『러시아 방송』, 1999. 8. 25.

102) 『러시아 방송』, 1999. 9. 14.

#### 다. 경제관계의 정체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러·북 양국의 노력은 1997~1999년 시기에도 계속되었다. 1996년 6,480만 달러로 최저 수준에 달했던 양국간 교역은 1997년 9,070만 달러로 약간 증가하다가 러시아의 모라토리움이 선언되는 1998년에 다시 8,390만 달러로 감소하였고 1999년에는 9,97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시기에 러시아는 북한과의 교역에서 매년 약 5,000만 달러의 흑자를 보았다. 결국 양국간 교역액이나 러시아의 무역흑자는 이 시기에 큰 변동없이 정체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러·북 양국은 경제난 때문에 교역 이외의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관계증진을 이루지 못하였다. 단지 1997년 4월 「과학기술협력 의정서」, 9월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었고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이 지속되었으며 구소련의 지원으로 북한에 건설되었다가 1990년대 초 이후 연료와 부품 부족 등으로 가동 중단된 일부공장들이 재가동되는 정도이었다. 1998년에는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수산물 가공 지원사업이 본격화되었고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쿠릴열도에서의 어로를 허용하는 등 어업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지속되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북한 금속공업부와 러시아 석탄수출회사 「머큐리」(Merkuri)사 간에 김책제철소에 대한 코크스탄 공급계약을 1998년 4월 체결하였고, 평양시의 주된 전력 공급원인 평양 화력발전소 재건설에 러시아 기술진이 참여하는 계획이 7월 발표되었다.<sup>103)</sup> 그네즈딜로프(Gnezdilov) 나호드카 시장과 고성국 나호드카 주재 북한 총영사는 1999년 3월 북한과 연해주 도시들 간의 경제 및 문화연계, 북한

103)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1998), pp. 60~61.

건설공들에 의한 1만석 규모의 나호드카 축구장 건설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거대 석유업체인 「유스코-페트로렘」사 대표단이 4월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하여 디젤유 공급문제를 논의한 듯하다는 「이타르 타스」(4. 29) 통신의 평양발 보도가 있었다.<sup>104)</sup> 러시아 극동의 기술자들이 작업에 착수하여 신포의 콩치 통조림 공장이 1999년 후반기에 재가동되었다. 총생산량의 70%는 러시아에 수송되고 나머지는 북한측이 처분하도록 계약되어 재가동된 이 공장은 러시아와 합작으로 1957년 건설된 것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회사들은 북한의 낮은 과세와 값싼 노동력 그리고 범죄요인의 부재 때문에 북한 내에서의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 시기에도 북한의 경제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러시아 연방하원인 국가두마는 1998년 3월 식량, 연료, 의약품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연해주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 모은 식량 등 원조물자 60여톤을 북한측에 4월 말에 전달하였다.<sup>105)</sup> 또한 박의춘 주러시아 북한대사가 1999년 초에 노보시비르스크 주를 방문하여 주 정부에 식량과 씨감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외국과의 쌍무적인 정부간 통상, 경제 및 과학, 기술위원회를 이끌게 될 각료들을 동년 6월 확정 발표했는데 북한을 필리포프(Filippov) 교육장관이 담당하게 되었다.

104) 「조선일보」, 1999. 5. 9.

105) 민족통일연구원 (1998), p. 61.

### 3. 재정립기(2000년 전반기~현재)

2000년 전반기이후 러·북관계는 1961년 동맹조약을 대체하고 양국 간 기본관계를 규정하는 신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소 수교이후 약 10년만에 냉각기를 청산하고 보편적인 국가간 관계로 재정립되었다. 안보·군사면에서는 2000년 6월 13~15일 남북정상회담 직전 김정일의 방중, 남북정상회담 직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과 방북 등을 통해 러·중·북 3각 안보협력이 긴밀하게 되었다. 또한 러·북 양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협관계 발전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러시아간 3각 경협을 적극 모색중에 있다.

#### 가. 신조약 체결

1961년의 동맹조약을 대체하는 신조약 『러·조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99년 3월 17일 가조인되었으나 공식 조인이 수차례 연기되었다.<sup>106)</sup> 마침내 신조약 체결을 위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990년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방북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인 총 33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2000년 2월 9~10일 평양을 방문하였다. 이는 당시 러·북 양국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이었다. 러시아에서는 대선이 3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엘친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퇴로 연초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던 푸틴 총리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1999년 9월 『베를린 회담』을 통

106) 러시아 정부는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김정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였는 바, 이는 이바노프의 방북이 지연된 이유들 중 하나이었다.

해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은 대북한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한 이후 미·북 및 일·북관계가 더욱 접근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대국 러시아’ 건설을 지향하는 러시아 정부는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재평가하는 한편,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1996년 9월 동맹조약 폐기이후 법적 기초를 갖지 못한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1999년 9월 『페리 보고서』 발표이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이탈리아와 수교하는 등 전방위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한 북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보편적인 관계로 정립하는 한편, 대미·대일·대남 관계에서의 협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조약이 양국관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고 21세기에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 발전을 증진할 것이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킬 것”<sup>107)</sup>이라는 평양 도착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한반도의 긴장 지속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쌍무관계 강화와 정치적 대화 수준 제고에 대한 신조약의 기여 가능성, 협상을 통한 한반도문제의 해결과 한민족의 평화통일 노력 지지, 한반도의 군사·정치적 상황 개선과 동북아 평화·안전의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주변국들과의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김정일에 대한 푸틴의 메시지를 북한측에 전달하였다.<sup>108)</sup> 당시 김정일이 공식 석상에서 외국대표단을 접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담 계획은 잡혀있지 않았다.

2월 9일 이바노프와 백남순 북한 외상 간에 공식 조인된 신조약<sup>109)</sup>은 전문과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10년 간의 전반적인

107) “Russian FM Issues Statement on Arrival in N. Korea,” FBIS-SOV-2000-0209, p. 1.

108) “Ivanov Gives Putin Message to North Korean Leader,” FBIS-SOV-2000-0209, p. 1.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문서이다. 신조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동등권 및 국제법 원칙을 기초로 우호관계 발전(제1조).
- 쌍방중 일방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은 즉각 접촉(제2조).
- 상호 이해가 관계되는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기적 협의(제3조).
-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에 따른 한반도 통일 지지(제4조).
- 통상, 경제,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제5조).
- 양국 의회와 다른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간 관계 심화(제6조).
- 양국 도시, 기업, 단체 및 양측 인사간 접촉 등 다양한 수준에서 다방면의 접촉 활성화(제7조).
- 조약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이 12개월 내에 조약의 연장불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5년 단위로 자동연장(제12조).<sup>110)</sup>

신조약에서는 1961년 동맹조약의 주요 내용이었던 이념적 연대 조항과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배제되었다. 그러나 러·북 양국은 ‘안보위협 발생시 즉각 접촉’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제한적 군사협력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는 양국이 『한·러 기본관계조약』 제2조 규정보다는 더욱 긴밀한 군사협력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그 동안 주장해

109) 신조약을 북한은 2000년 4월 6일, 러시아 연방하원인 국가두마는 7월 19일, 연방상원인 연방회의는 7월 27일 각각 비준하였고, 10월 30일 발효되었다.

110) “북-러 신조약 전문,” [www3.yonhapnews.co.kr](http://www3.yonhapnews.co.kr). (2000. 11. 3).



온 고려연방제 지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조약 체결 직후 러·북 외무장관은 “이 조약의 체결은 두 국가 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 된다”고 밝히고 “쌍방은 국제적 긴장의 항구적 요인이 되고 있는 조선의 분열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 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sup>111)</sup>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러시아측 대표단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백남순 외무상 등 북한 고위관리와 양국 인사들의 교환방문을 비롯한 정치, 경제적 협력 증진, 미·일의 TMD 체제에 대한 공동 대처, 한반도 정세, 북한 무기체계와 구소련 시대 건설된 공장들의 노후화에 따른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러시아측은 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의 전세계적 통제에 대한 북한의 지지와 참여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sup>112)</sup>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출국직전 기자회견에서 “1990년대 러·북 간에 직면했던 냉각기가 극복되었다”고 밝히고 “러시아는 한반도가 안정과 평화의 지역이 되는 것을 선호하며 이 지역의 정치적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sup>113)</sup>는 입장을 취하였다.

톨로라야(Toloraya) 러시아 외무부 제1아시아국 부국장은 “새로운 현실의 인정을 기초로 하는 관계에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의미한다”<sup>114)</sup>고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방북을 평가하였다. 한국 정부는 “서

111) 『대한매일』, 2000. 2. 11; “Russia, North Korea say Treaty Signals ‘New Stage’ in Ties,” FBIS-SOV-2000-0209, p. 1.

112) “Russian Spokesman on Ivanov’s Visit to North Korea” FBIS-SOV-2000-0208, p. 1.

113) “Ivanov Says ‘Chill’ in Russian-DPRK Relations Overcome,” FBIS-EAS-2000-0210, p. 1.

울의 국익을 훼손하는 어떠한 규정도 러·북간 기본관계 조약에 포함되지 않을 것”<sup>115)</sup>이라고 전망하면서 러·북 접촉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경제난에 처한 북한과 관계를 증진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냉전시대에 공수동맹 관계이었던 러·북관계는 탈냉전기를 맞아 1990년대 전반기에 방어동맹으로 변화되었다가 신조약 체결을 통해 보편적 국가간 관계로 전환되었다. 러시아는 남북한과 모두 기본관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균형된 남북한관계를 국제법적으로 확립하게 되었다.

#### 나. 남북정상회담 지지와 푸틴의 방북

2000년 초에 러·북관계가 재정립됨에 따라서 양국 간에는 긴밀한 안보협력도 이루어졌다. 우선 북한은 1999년 9월 베를린 미·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미사일 개발계획을 유예하기로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다탄두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이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이즈베스티야』지 보도<sup>116)</sup>에 의하면, 1998년 8월 31일 인공위성을 탑재한 미사일의 실험 발사 이후 엔진부분 등의 개량작업에 현저한 성공을 거둔 북한은 2000년 2월 16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위해 이미 1월말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발사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이바노프가 2월 9~10일 북한을 방문하였을 당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것

114) “Ivanov Heads For N. Korea To Improve Ties,” *Russia Today*, Feb. 9, 2000, [www.russiatoday.com/news.php?id=132793](http://www.russiatoday.com/news.php?id=132793).

115) “DPRK-Russia Treaty Said Not To Undermine ROK’s Interests,” FBIS-EAS-2000-0209, p. 1.

116) *Izvestiya*, 2000. 2. 17.

이다. 『이즈베스티야』지는 또한 북한측이 러시아의 신군사독트린에 입각하여 북한을 러시아의 핵우산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신 미사일 및 미사일 기술 비확산 국제협상에서 북한을 러시아의 완전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이 합의로 인해 북한은 자연스럽게 강력한 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이른바 ‘엘리트 클럽’에 자동 가입하게 됐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발표되고 한·미·일 3국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책을 조율하는 등 공조 체제를 긴밀히 하자 김정일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000년 5월 29~31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여 고 위인사들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협의하고 경제시찰을 하였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동년 7월 19~20일로 예정되어 있어 남북정상회담의 준비와 진행 과정을 예의 주시했으며 이 회담을 획기적인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지하며 크게 만족하였다. 정상회담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자, 러시아 정부는 “남북한의 두 지도자가 만난 것은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남북한 화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반도가 실질적 평화로 나아간다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되는 것”<sup>117)</sup>이라고 외무부 대변인의 공식성명을 발표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주변국의 개입없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직접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 크게 만족하였다. 이는 주

117) “Moscow Hopes P’ongyang Summit Will Help Korean Reconciliation,” FBIS-EAS-2000-0614; 『러시아방송』, 2000. 6. 14 & 6. 16.

변 4국 중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해 가장 적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일의 영향력 약화가 기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 러시아는 남북공동선언의 실현에 많은 난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남북대화의 지속을 위해서 남한은 평양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미국 및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18)</sup>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되는 「선진공업 8개국회의」(G8)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에 7월 17~19일 중국과 19~20일 북한을 먼저 방문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최고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하였고, 러시아 연방 하원 국가두마 내에 20명도 안되는 3선 의원 중 한 명인 고려인 유리 정(정홍식) 의원도 수행원으로 동참하였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목적은 미·일의 TMD 계획과 남북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제 견제, 러·북간 군사협력 문제 협의, 향후 자신의 방한을 약속한 상황에서 남북한에 대한 균형관계 유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 경제실익 확보 등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경협 문제 등을 논의하고 11개 항의 「조·러 공동선언」<sup>119)</sup>을 7월 19일 채택하였다. 그 주요 내용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조약인 「러·조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을 기초로 전통적인 선린관계를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러·북관계의 재정립을 확인하였다. 둘째, ‘안보위협 상황 발생시 지체없는 상호 접촉’이라는 신조약 규정을 재확인함으로써 러시아는 북한 안보의 후견자 역할을 지속하게 되었다. 셋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러

118) 「러시아 방송」, 2000. 6. 16; 「조선일보」, 2000. 6. 9.

119) 통일부, 「북한동향」, 제496호 (2000. 7. 15~7. 21), pp. 45~48.

시아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타국 간섭을 배제하고 자국의 상대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게 되었다. 넷째, “ABM 조약 수정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이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삼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확증한다. 조선은 자기의 미사일 강령이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며 순수 평화적 성격을 띤다는 것을 확인한다. 전역미사일 체계 배치에 반대한다”고 함으로써 미사일 문제에 대해 공동 입장을 취하였다.

중·러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와 중·북간 군사동맹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시 안보면에서 상기와 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러 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2000년 중반기에 러·중·북한 간의 3각 안보협력이 긴밀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과 관련, “국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완전한 현대인으로 보였으며, 그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북한 지도자들과 나쁘지 않은 개인적 관계를 맺은 것도 성과 중의 하나”<sup>120)</sup>라고 평가하였다. 김정일도 러시아 최고 지도자의 첫 평양 방문 결과에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7월 19일 『인테르팍스』 통신이 “다른 나라들이 평화적인 우주탐사를 위한 로켓 발사체를 제공할 경우 단지 타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용할 것을 김정일이 푸틴에게 말했다”<sup>121)</sup>고 보도함으로써 한·미·일 등 관계국은 이 보도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였다. 이 보도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그 동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으나, 칼라룸프르 주재 미 대사관에서 11월 1~3일 개최된 미·북 미사일 전문가회담에서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은 북한 인공위성을 발사해 준다는 원

120) “Putin Says North Korean Leader Accepts Invitation To Visit Moscow,” FBIS-SOV-2000-0720, p. 1; 『중앙일보』, 2000. 7. 21.

121) “Putin Views Supplying Booster Rockets For Space Research,” FBIS-SOV-2000-0719, p. 1.

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한 미국이 요구해 온 ‘미사일 개발중단을 검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도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sup>122)</sup>

동년 9월 1일 푸틴 대통령은 북한 정권수립 52주년에 즈음하여 김정일에게 “두 나라 사이의 선린관계와 건설적인 호상협조가 친선과 협조의 다년간의 경험과 전통에 기초하여…여러 분야에 걸쳐 앞으로 성과적으로 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 “쌍무적 연계의 심화발전이 조선반도와 전반적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sup>123)</sup>는 축전을 보냈다. 김정일은 푸틴 대통령 방북시 초청으로 9월초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고 연해주에서 양국간의 구체적인 경험사업을 논의한 이후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그의 러시아 방문은 2001년으로 연기되었다. 이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남 및 대미 문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태지역 방위관계자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중인 이바쇼프(Ivashov) 러시아 국방부 대외협력국장은 “러시아가 한반도 군사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동년 10월 18일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남북한 두 나라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북한과도 역시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함으로써 러시아 정부가 균형된 남북한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시켰다. 또한 그는 러시아와 북한 국방장관 간의 접촉이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정은 체결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군사기술 협력이 7월 푸틴 대통령 방북시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었다고 말했다.<sup>124)</sup> 따라서 당시 러·북 간에 군사

122) 『조선일보』, 2000. 11. 4.

123) “푸틴, 북한 정권수립 52주년 축전,” [www3.yonhapnews.co.kr](http://www3.yonhapnews.co.kr). 2000. 9. 5.

기술 협력 문제가 이미 심도있게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다. 남북한·러시아간 3각 경협 의 모색

2000년에 러시아는 국내경제 호전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 분위기 속에서 경제적 실익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한·러시아 간의 3각 경협을 적극 모색하였다. 러시아는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러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KEDO 참여에 대한 의사를 계속 표명하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1994년초 이후 극동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과 석탄 및 에너지 개발, 북한내 기업 현대화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한반도 종단철도 재건 등 17개 분야에서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및 러시아의 자원을 결합하는 3각 경협을 제의<sup>124)</sup>하여 왔으나 한국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 2000년 2월 신조약 체결을 위한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방북시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북한 공장들의 재건과 현대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포함한 경협 증진 방안이 논의되었다. 동년 4월 10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발표되자 러시아 정부는 북한내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에 대한 공동 참여 의사를 한국 정부에 밝혔다. 푸틴 대통령도 방북시 김정일과 구 소련의 기술로 건설된 산업시설들의 복구, 남북한과 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대륙횡단 철도 사업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사업

124) "Russia to develop military cooperation with DPRK," FBIS-SOV-2000-1018, p. 1.

125) 모스크바 무역관, "한국, 북한, 러시아 3각경협 가능성 모색," 『북방통상정보』 (1994. 1), pp. 128~130 참조.

등 구체적인 경제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남북한 철도 연결과 철도망 정비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모리 일본 총리에게 전달해 주도록 일본을 방문하는 푸틴 대통령에게 부탁하였다.<sup>126)</sup>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임업상 및 채취공업상과도 회담을 갖고 극동지역의 수산업, 광물채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실무적인 회담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수행했던 고려인인 정유리 러시아 연방하원 의원의 인터뷰에 의하면 러시아는 남북한과 중국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가장 현실적인 경제 프로젝트로 간주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 실현시 시베리아 철도를 통한 수송량이 5~6배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러시아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다. 남북한간 20~30km 철도 연결 등 모든 프로젝트는 1년 동안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유리 의원에 의하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과정에서 러시아 가스를 남북한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도 토의되었는데, 이와 관련, 사할린 프로젝트는 4~5년이면 실현되고 이르쿠츠크 프로젝트는 10년 소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27)</sup>

필리포프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대표단이 동년 10월 17~20일 평양을 방문하여 강정모 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측 대표단과 제3차 「러·북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sup>128)</sup>를 개최하였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시 러·북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 회의에는 양측

126) 「러시아 방송」, 2000. 8. 4 & 8. 11.

127) *Izvestiya*, 2000. 7. 25.

128) 러·북 양국은 1992년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개최를 합의하였으나 제1차 회의는 1996년 4월 평양, 제2차 회의는 1997년 10월 모스크바에서 각각 개최되었다가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중단되었다..



에서 무역, 금융, 과학기술, 노동, 운수 등 다양한 경제부문 실무급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대러 부채 문제, 북한 노동력의 러시아 진출 문제, 석탄산업과 운송부문 협력 문제, 남북한 철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을 포함한 남북한·러시아간 3각 경협 문제 등이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sup>129)</sup>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구소련 시대부터 지고 있는 부채의 재조정이 선행되어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따라서 이 회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제가 북한의 대러 부채 상환 재조정 문제이었다. 러시아측은 그 동안 북한이 채무의 1/3을 상환할 것과 나머지 부분의 상환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sup>130)</sup> 따라서 양측은 정확한 부채규모, 부채 상환 단계와 방법 등에 관해 협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남북한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에 큰 관심을 보이던 러시아 정부는 그 연결 공사를 2000년 내에 착공하기로 결정하였고, 10월 30일 평양을 방문한 첼코 러시아 철도부 제1차관이 양국 철도 연결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북한 철도를 한국과의 경계인 휴전선까지 잇는데 필요한 지뢰제거를 포함한 기술과 건설 재정지원을 북한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남북한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데 5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31)</sup>

한편 러시아 정부는 그 동안 KEDO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여 왔는데 푸틴 대통령의 방북시에도 러시아의 KEDO 참가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

129) 통일부, 『북한동향』 제509호 (2000. 10. 14~10. 20), pp. 8~9.

130) 『러시아 방송』, 2000. 7. 20.

131) "Moscow, Pyongyang Contemplate Mine-Clearing Operations Near DMZ," FBIS-SOV-2000-1031. p. 1.

최된 G8 회담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KEDO에 러시아를 참가시킬 문제에 관심을 돌렸고 현재 미국과 일본도 이와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러시아의 KEDO 가입 문제를 앞으로 전문가급에서 취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sup>132)</sup> 더욱이 러시아는 KEDO 자금으로 러시아제 원자료를 북한에 제공하는 방식을 관계국들에 거듭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 원자력장관에 의하면 러시아가 KEDO의 북한 경수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서방 회사들이 제시한 비용의 1/3로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33)</sup> 이와 같이 러시아 정부가 KEDO 참여와 러시아제 원자로 공급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 2기가 본래 계획대로 2003년까지 제공되지 못하고 2008~9년에야 완공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경제실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

132) 『러시아 방송』, 2000. 7. 23.

133) “러 ‘북 경수로 서방 3분의 1 가격 건설가능’,” [www3.yonhapnews.co.kr](http://www3.yonhapnews.co.kr), 2000. 9. 6.

## IV. 푸틴의 대북정책 전망

### 1. 러·북관계 강화요인

상기와 같은 러시아의 외교노선 변화과정 및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구조, 그리고 1994년 후반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러·북관계 변화추이를 고려해 볼 때, 양국관계의 강화요인은 푸틴과 김정일 양국 지도자의 접근 필요성 인식, 러·중·북한간 공동의 안보이해, 한·러 경협부진과 남북관계 진전, 러시아 좌파 인사들의 친북한 로비활동 등이 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와 북한의 국내정치가 비교적 안정을 찾음에 따라서 푸틴과 김정일은 대외적으로 전방위외교를 수행하면서 상호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푸틴은 '강대국 러시아' 건설과 경제난 해결을 위한 유리한 국제여건 조성을 외교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는 TMD를 포함한 미·일의 역내역할 증대 견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 견제, 한반도문제에서 소외 탈피와 발언권 강화, 역내국가와 경제관계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정일은 체제유지와 경제난 해결을 외교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동맹관계 유지, 외교적 고립 탈피, 역내국가로부터 경제지원 유도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1994년 후반기 이후 러시아는 한·소 수교이후 악화된 대북관계 재정립을 모색하여 왔으나 북한은 러시아 언론에 대한 불만과 미국 중립정책 등으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1999년 9월 「페리보고서」 발표이후 체제유지를 위한 수세적 외교로부터 전방위외교로 전환하면서 대러관계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6년 9

월 동맹조약이 폐기된 이후 3년여 만에 양국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러·북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둘째, 세계적 안보질서 차원과 동북아 안보질서 차원에서 러·중·북한 간에는 상당 부분 공동의 안보이해가 존재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냉전종식이후 미국의 국제질서 주도에 반대하면서 다극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국제분쟁을 미국의 주도가 아닌 유엔을 통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코소보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미국은 인권을 중시하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주권을 더 중시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분쟁의 해결과 냉전종식이후 양국은 정례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고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하고 있다. 중·러 양국은 1996년 미·일 신안보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고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와 미·일의 TMD 계획에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1961년 체결한 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와는 동맹조약을 폐기하였으나 이를 대체하는 신조약과 「조·러 공동선언」을 통해 안보를 보장받으면서 상기와 같은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대부분 중·러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러·중·북한 간의 긴밀한 안보협력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김정일의 방중 및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과 방북 사례를 통해 명백히 증명된 바 있다.

셋째, 그 동안 한·러 경협이 부진과 2000년 들어서 나타난 남북관계의 진전도 러·북관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4년 후반기 이후 러시아가 한국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균형된 남북한정책, 즉 한·소 수교이후 악화되었던 대북관계를 복원하려는 정책으로 전환한 주요 이유는 기대하였던 한·러 경협이 부진 때문이었다. 물론 경협차관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미상환 및 투자여건 미비 등 러시아측의 책임도 크나, 한국 정부의 대러 경제지원이 중단되지 않았고 한국

기업의 대러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면 1994년 후반기 이후에도 러시아의 한국 중심정책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러시아의 대북 경제관계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체된 상태에 있던 러·북 경제관계가 2000년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남북관계의 진전 때문이다. 러·북 간의 경제관계 확대는 양국의 경제난으로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남북한·러시아 간의 3각 경협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에 러시아는 상당한 경제 실익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일부의 남북경협 사업을 3각 경협과 연계시키기 위해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넷째, 한·소 수교이후 악화되었던 러·북관계의 재정립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러시아 좌파 및 민족주의 성향 인사들의 의회 및 언론에 대한 친북한 로비 활동이었다. 1993년 12월 12일 러시아 최초의 민주선거가 실시된 결과 연방하원인 국가두마에서 자민당, 공산당 등 극우민족주의, 좌파 정당들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자 북한은 이들과의 연대 및 친선관계를 모색하였다. 또한 비정부 차원에서 러·북간 연대와 친선은 「러·조 친선문화협회」, 「조선해방전쟁 참전용사협회」 등을 통해서도 긴밀하게 되었고 이들은 북한의 대외정책과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곤 하였다. 김일성 사후, 즉 1994년 후반기 이후에도 러시아 자민당과 친공산계 의원들 및 구소련 시대 공산당과 정부의 인사들이 러·북관계 재정립과 러시아 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러시아 공산당 당원들이 북한을 이념적 동료로 보고 있고 민족주의자들이 북한을 미국과 일본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 군사적 파트너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1994년 10월 3~5일 지리노프스키 러시아 자민당 당수는 평양을 방문하여 비정부 차원에서 러·북간 접촉 확대, 북한 노동당과의 친선

관계 발전 및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후한 대접을 받았다. 1996년 6월 4일 러시아 연방하원인 국가두마 지정학문제위원회는 국회청문회를 개최하여 러·북문제를 총괄적으로 토의하고 북한과의 관계 증진에 수동적인 러시아 외무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권고안과 양국 의원연맹 창설 문제 등 제기한 바 있다. 이 청문회를 주도한 사람들은 자민당 의원으로서 지정학문제위원회 위원장인 미트로파노프 및 그의 측근 인사들이었다. 김일성 3년상 직후 라프신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농업당 대표단이 1997년 9월 21~24일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노동당과의 관계 발전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구소련 국방부 장관 야조프, 소련공산당 중앙위 위원장 쉘닌 등 다수의 저명한 러시아 공산주의자들도 방북하여 김정일과 구소련 붕괴의 원인 및 결과 등에 관한 대화를 가졌다. 이들은 방북이후 러시아 의회나 언론 등에 북한을 선전하며 북한과 김정일 및 그의 정권을 비방하는 러시아 언론들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 2. 러·북관계 제약요인

1994년 후반기 이후 러·북관계 발전을 제약해 온 요인들은 양국의 경제난과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무기 제공, 미·북 및 일·북 접근 등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에서 양국의 경제난과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는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러·북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난은 1994년 후반기 이후 관계개선 노력에 대한 주요한 장애요인이었다.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94년 -12.7%, 1995년 -4.2%, 1996년 -3.5%로 하락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소련 붕괴 이후 최초로 1997년에 0.9%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다시 -4.9%로 하락하였다가 1999년에 3.2%를 기록하였다.<sup>134)</sup> 이와 같이 러시아 경제는 회복 추세에 있으나 경제난 극복에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흥 과두산업재벌들의 경제독점과 정경유착, 관료들의 부정부패, GDP의 약 40%에 이르는 지하경제, 대외부채의 증가(1994년 1,215억 달러, 1999년 1,743억 달러), 막대한 외화의 해외도피 등의 문제들을 상당한 수준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편 3차 7개년계획(1987~1993년)의 실패를 공식 인정한 북한은 1994~1996년 3개년 간의 완충기를 설정하고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GDP 성장률이 1994년 -1.8%, 1995년 -4.6%, 1996년 -3.7%, 1997년 -6.8%, 1998년 -1.1%를 기록하였다. 특히 1995~1996년 흉수와 1997년 가뭄 등으로 농업이 심한 타격을 받았다.<sup>135)</sup> 그러나 1998년 9월 헌법 개정 이후 북한의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로 GNI(국민총소득)가 1998년 126억 달러에서 1999년 158억 달러로 25.4% 증가하고, 재정규모가 1998년 91.0억 달러에서 1999년 92.2억 달러로 1.3% 증가하는 등 경제총량이 다소 증가하였다. 대외무역 규모도 1998년 14.4억 달러에서 1999년 14.8억 달러로 다소 증가하고 식량난, 에너지난도 재배면적 확대 및 부존 자원개발 노력 등으로 다소 완화되었다. 이 결과 북한

134)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Russia* (London: EIU, 2000), p. 5.

135) 김성철 외, 「북한 이해의 길잡이 - 전환기의 북한사회 -」 (서울: 박영사, 1999), pp. 182~187.

경제는 1990년 이후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1999년 6.2%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를 1989년과 비교할 때, GNI는 65.8%, 재정규모는 61.3%, 대외무역은 30.5%, 곡물생산량은 92.3%, 석탄생산량은 59.9%, 전력생산량은 63.2%에 불과한 실정이다.<sup>136)</sup> 러·북 양국은 상기와 같은 구조적인 경제난으로 1994년 후반기 이후에도 관계를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는 러·북간 경제협력, 특히 러시아의 대북 투자에 대한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채무는 1998년 현재 121억 달러이기 때문에 대러 채무 비율은 약 41%에 해당한다. 북한의 외화난 때문에 1999년까지 북한측에 의한 “채무의 상환 전망은 완전히 안개 속과도 같은 상황이며 채무문제의 조정에 대한 회답은 북한측에 의해 사보타지 당했다.”<sup>137)</sup> 그러나 북한은 2000년 7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시 채무상환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up>138)</sup> 또한 필립포프 러시아 교육장관 겸 「러·북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러시아측 위원장은 9월 26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투자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옛소련 시절부터 지고 있는 대러시아 부채의 재조정이 선행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10월 17~20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러·북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에서 북한의 부채상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었다. 러시아는 북한측에 현금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현물상환도 가능함을 밝혔고 정확한 북한의 대러 채무규모를 확정하

136) 통일부 정보분석국, 「북한동향」, 제500호(2000. 8. 12~8. 18), pp. 42~43 참조.

137) Kunadze “Security and Economic Situa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with Emphasis on North Korea” (1999), p. 4.

138) 「러시아 방송」, 2000. 9. 16.



는 문제와 상환 단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sup>139)</sup>

셋째, 경협차관 상환차원에서 행해진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무기 제공은 북한의 강한 불만을 야기하였다. 구소련에 제공된 14억 7,000만 달러 경협차관과 관련, 한·러 양국은 1994~1995년 실무회담 등을 통해 한국이 경협차관 일부를 알루미늄, 철강, 니켈 등 원자재 뿐만 아니라 전차, 장갑차 등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1996년 한국에 T-80U 전차, BMP-III 장갑차, METIS-M 대전차유도탄, IGLA 지대공미사일 등 1억 5,000만 달러 상당의 러시아 무기가 도입되었다. 또한 러시아 무기수출회사 『로스바루제니에』 서울지사가 설립되어 SU-35/37 전투기, C-300V 방공시스템, 해군 방공시스템, 함정용 크루즈미사일, 블랙샤크 전투용 헬리콥터, Mi-26 수소용 헬리콥터 등의 도입을 위한 한·러 양국간 교섭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1999년에도 세르게예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제 킬로급(3,000톤) 및 아무르급(2,000톤) 잠수함과 함께 차기 대공미사일(SAM-X) 사업의 후보기종인 S-300 미사일과 차기전투기(FX) 사업 후보기종인 SU-35 전투기 등의 구매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경협차관 상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무기 제공과 경제실익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러시아의 군사무기 판매 노력은 구소련식 무기체계를 갖고 있는 북한에 중대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인도, 중국, 파키스탄, 이란 등을 통해 러시아의 방공체계, 미사일 방어체계, 잠수함 등 첨단 군사무기와 그 샘플들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넷째, 1994년 10월 제네바 핵합의 이후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접근정책은 러·북관계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

139) “러·북 부채상환 재조정이 급선무,” 『연합뉴스』, 2000. 9. 26.

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체제보장 및 경제적 실리 확보를 위해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대미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미·북 고위급 회담 개최, 미국 핵사찰단의 금창리 방문 수용, 미군유해 협상, 미사일회담과 테러 협상, 미사일 발사유보 조치 등을 통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와 식량지원을 이끌어냈다.

특히 ARF 외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최초의 미·북 외무장관 회담이 2000년 7월 28일 개최되었고, 북한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미국의 식량 5만톤 지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북한은 일·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1997년부터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을 허락하고 일본정부로부터 식량지원을 얻는 한편, 7년만에 관계개선을 위한 제9차 및 제10차 수교 본회담을 2000년 4월과 8월 각각 개최하였다. 그러나 쌍방은 수교 본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입장차이만 확인하였다. 북한은 과거청산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요구하면서 동 문제 해결이 일·북관계 개선의 기본문제라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핵과 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주장하였다. ARF 회의 기간 중인 7월 26일 최초로 일·북 외무장관 회담도 개최되었다.

제네바 핵합의이후 이러한 대미, 대일 중시정책 때문에 북한은 러시아의 대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러관계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3. 푸틴의 대북정책 전망

향후 푸틴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러시아의 국내정세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노선과 연계되어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러시아의 대내정치와 경제 및 대외 정책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1999년 12월 19일 실시된 제3대 러시아 총선 결과 국가두마에서 친정부·개혁 세력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과거와 같은 보·혁간 대립과 갈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sup>140)</sup> 따라서 푸틴 대통령은 열린 전대통령의 개혁정책 실패로 노정된 부정부패, 경제난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 범죄 증가 등의 산적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강한 정부’를 기반으로 하되 국가가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 적극 개입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주도의 발전전략’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1999년 이후 루블화 평가절하에 따른 국내 산업생산 회복(1999년 10% 증가)과 긴축정책 기조 유지, 물가 및 환율 안정, 무역흑자(1999년 341억 달러) 등으로 거시경제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 1998년 8월 외환위기 이후 중단된 IMF(45억 달러), 세계은행(18억 5,000만 달러), 일본(11억 5,000만 달러) 등의 대러 자금지원이 재개되었고 구소련 채무(약 1천억 달러) 상환일정 재조정 협상도 개시되었다. 영국의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 보고서에 의하면 1998년 -4.9%, 1999년 3.2%이었던 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2000년 5.5%, 2001년 3.0%로 예상되고 있다.<sup>141)</sup>

대외정책과 관련, 푸틴 대통령은 전방위 외교노선을 유지하되 경제 실익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현실주의적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전

140) 국가두마에서는 친정부·개혁파가 53%, 중도파가 10%, 공산·극우민족주의파가 34%, 기타 소수정당 및 무소속이 4%의 의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141)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Russia (London: EIU, Sep. 2000), p. 12.

망된다.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약 10만, 유럽에서 약 14만 병력을 유지하면서 국제질서를 계속 주도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벨로루시 등 CIS내 친러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이를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는 NATO 중심의 유럽-대서양 안보체제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아·태지역에서 다자안보협의체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지역위기와 분쟁의 방지 및 해결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적극 관여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일 간 신안보체제와 중·러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푸틴 대통령은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실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 우호관계 강화, 비대결적 대미 관계 유지, 대일 협력관계 활성화, 무기수출 확대, 균형된 남북한정책 등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향후 대내정세와 대외정책을 상기와 같이 예상할 때 푸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대북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 정치면

러시아와 북한은 21세기의 양국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규정하고 지정학적 차원에서 향후 협력을 내다보고 있는 2000년 2월 9일의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과 7월 19일의 「조·러 공동선언」을 기초로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은 양국관계가 재정립 상태에서 벗어나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북, 일·북간 접근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러시아는 정부차원에서 대북관계를 확대하고자 노력할 것이나 국가두마에서 공산당 의석이 44석이나 감소하였음을 고려할 때 러시아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관계는 다소 약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 러시아내 좌파 및 민족주의 인사들의 의회와 언론에 대한 친북 로비활동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 나. 안보·군사면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견지할 것이다. 러시아는 1~2개 핵 폭탄 제조를 위한 충분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핵 연구와 개발을 완전히 은폐한 가운데 속도만 늦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 방지를 위해 한·미·일 등과 협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핵문제로 미국 등이 북한에 군사제재를 가하거나 강제사찰하는 데는 반대하고 협상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러시아는 2000년 체결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과 「조·러 공동선언」을 기초로 북한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군사무기와 기술의 수출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바쇼프 러시아 국방부 대외협력국장은 “우리는 남북한 두 나라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북한과도 역시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하고 “한반도 군사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142)</sup> 러시아는 북한과 군 고위인사들의 교류를 확대할 것이나, 러시아의 경화 요구로 대북 무기판매는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무기의 부품공급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향후에도 한국에 대한 경험차관 채

142) 『중앙일보』, 2000. 10. 20.

무의 일부를 군사무기로 상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구소련식 무기체계를 갖고 있는 북한의 불만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미사일 문제와 관련,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 NMD와 미·일의 TMD 계획이 가시화되고 미·북, 일·북 접근이 더욱 이루어질수록 러·중·북한간 3각 안보협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증진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막을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세계적인 미사일 및 미사일기술 확산금지 통제체제(GCS) 구축을 계속 주장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을 GCS에 참여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 다. 경제면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러시아 경제는 회복추세에 있으나 북한이 1999년 GDP 6.2%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각한 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부족 등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러·북간 경제관계의 정체가 예상된다. 러시아는 북한과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의 정례화를 통해 양국 경제관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러·북간 경제협력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첫째,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러 채무 문제이다. 약 1,500억 달러의 대규모 대외채무를 갖고 있는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부채상환을 덮어둔 채 또 다른 채무를 양산할 수 있는 경제협력과 지원에 적극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 러시아는 북한 채무의 탕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를 받아낼 것임을 강

조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경화결제 능력 부족이다. 구소련과 북한은 1990년 11월 2일 무역거래시 경화결제를 합의하였으나 매년 급감하는 대외무역과 이로 인한 외화난으로 경제협력시 러시아에 경화로 결제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셋째, 북한 경제정책에 대한 러시아 기업인들의 불신감이다. 북한은 1992년 10월 「조선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하고 외국인들의 투자유치에 주력해 왔으나 합의사항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등 불신감을 조성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러·북 경제협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143)</sup>

또한 러시아는 남북한 경협이 활성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경제적 실익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초 이래로 제안하고 있는 남북한과 러시아간 3각 경협의 실현을 계속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구소련이 북한에 약 70개의 공장과 발전소를 건설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북한의 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현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에 운송과 통신망을 재건하는 것은 러시아가 남한과 직접 협력하는 것을 더 쉽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석유, 가스, 목재, 수산물, 원자재 및 기술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3각 협력은 남북경협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이 러시아의 입장이다. 직접적인 남북한 협력의 중요한 장애들 중 하나는 남북한 상호간의 낮은 신뢰감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남북한 경제교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개자 역할은 남북한 협력에 대한 러시아 사업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고 러시아측은 주장한다. 한반도에 대한 정책에서도

143) 「내외통신」, 종합판(69) (1998. 7. 1~9. 30), p. 323.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정부는 이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3월 9일 『베를린선언』에서 밝힌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sup>144)</sup>

이와 함께 러시아는 경의선과 경원선 철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수송량이 5~6배 증가하고 컨테이너당 300달러 절감되리라는 것이 러시아측의 추산이다. 이미 러시아 정부는 경의선의 TSR 연결에 대해 남북한과 합의한 상태에 있다.<sup>145)</sup> 또한 2000년 9월 8일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경원선과 TSR의 연결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김정일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의 합의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철도가 연결되는 러시아의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주, 아무르주 등 지방정부들은 TSR 노선연결을 러시아와 남북한에 큰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주는 ‘윈-윈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sup>146)</sup>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경제난에 처해 있는 북한과의 양자간 경제협력보다는 남북한과 3각 경협을 통해 실익을 도모하는 실용주의적, 현실주의적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144) Alexander N. Fedorovsky, “The Russian Role in Constructing a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mmunity,”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 (통일연구원 창립9주년 기념 제9차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 4. 7), pp. 158~159.

145) *ITAR-TASS*, 2000. 11. 2.

146) “경의선, 한-러 ‘컨’당 300달러 절감,” [www3.yonhapnews.co.kr](http://www3.yonhapnews.co.kr). (2000. 9. 18).



## V. 우리의 대응방안

### 1. 정치면

우선적으로 우리 정부는 다수 국민들과 국가두마 과반수 이상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지지하고 10년간 유지되어 온 한·러 간의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0년 9월로 한·소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학계, 기업인, 언론인, 관료로 '대러정책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지난 10년간 한·러관계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향후 10년 간의 중장기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북한 문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1년 푸틴 대통령의 방한시 러·북관계의 발전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도 상응함을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정상회담 등 남북대화가 중단되지 않고 정례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러시아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푸틴 정부는 남북한에 균형된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남북정상회담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자국의 경제이익을 확보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복원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3각 경협 등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이익 확보를 어느 정도 용인하되, 러·북관계 확대가 한반도 안보와 남북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 한다.

2000년 2월과 7월 체결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과 「조·러 공동선언」을 기초로 러·북관계가 재정립되었기 때문에 향후 양국간

정치적 대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러시아 정부가 대한국 관계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점은 자국에 대한 소규모 투자와 함께 한·미, 한·일, 한·중 관계에 상응하는 고위인사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양국 정계, 관계,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정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현재 외교통산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199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러 포럼」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9년 12월 총선에서 3선에 성공했고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을 수행하여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정홍식(유리 정) 국가두마 의원은 12만 고려인의 지위향상과 한·러관계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그를 초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안보·군사면

한반도와 관련한 안보·군사문제의 발생시 러시아 정부에 사전통보 하거나 사후 설명함으로써 1996년 4월 4자회담 발표 때와 같이 러시아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제네바 기본합의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연구와 개발의 속도를 늦추었고 이를 완전히 은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1998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강행하였을 때 러시아의 핵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시적으로 동결된 핵개발 계획을 재시도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핵개발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 미사일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실을 용인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세계적인 미사일 및 미사일기술 확산금지 통제체제(GCS)를 구축하고 이에 북한을 가입시키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미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을 이에 가입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미·러, 미·중 간에 안보·군사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 중·러·북한의 3각 안보협력 강화가 한반도의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또한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고위 군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보·군사 면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3. 경제면

남북정상회담 합의 발표이후 러시아 정부는 북한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대한 공동참여 의사를 우리 정부에 밝혔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과 석탄 및 에너지 개발, 북한내 기업 현대화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한반도 중단철도 재건 등 17개 분야에서의 남북한과 러시아 간의 3각 경협을 제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실현 가능한 분야에 대해 단·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사할린과 이르쿠츠크의 원유와 가스전 개발 같이 많은 시간과 자본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는 미, 일 등과 콘소시엄을 형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001년 푸틴 대통령의 방한시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인 양국간 교역과 투자 확대 등 경제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소 수교이후 우리 정부는 나호트카 한국기업공단 설치, 사하(야쿠티아) 공화국 천연가스전 공동개발, 과학기술 관련 74개 공동사업 등에 합의하였으나 한·러 양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약속된 사업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실행가능한 소규모 약속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KEDO 참여를 통해 경제적 실익 및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 바, 경수로의 일부 부품에 대한 공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또한 경의선과 경원선 남북한 철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럽 수출 컨테이너 화물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노선을 이용하면 연간 770만~1,700만 달러의 운임 절감이 가능하고 운송기간도 해상운송에 비해 15~17일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한과 러시아 모두에게 물류비용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와 화물 보안관리 문제 등을 3국 협의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성철 외. 『북한 이해의 길잡이 - 전환기의 북한사회 -』. 서울: 박영사, 1999.
- 민족통일연구원, 『주변 4국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환경』.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_\_\_\_\_. 『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 1995~1996』.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_\_\_\_\_.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세종연구소. 『러시아연방 국가안보 신개념(전문)』, 통권 제2호 (2000. 2).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Russia*, 3rd quarter 1999. London: EIU Ltd., 1999.

### 2. 논문

- 김태호. “1990년대 중·러 군사협력의 현황과 전망.” 『중소연구』, 20권 1호 (1996년 봄).
- 뜨까첸꼬, V. P.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이해관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와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공동주최 제9차 한·러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8. 10. 22~23).
- 야스니꼬프, V. S. “러시아와 중국: 아태지역에서 동반자관계의 전망,”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와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공동  
주최 제9차 한·러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8. 10. 22~23).
- 모스크바 무역관. “한국, 북한, 러시아 3각경협 가능성 모색,” 『북방통  
상정보』, 1994.
- 문장렬. “북한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 『한반도 군비통제』  
(1998. 12).
- 이창재. “제2차 한·러포럼 발제문: 한·러 경제협력의 나아갈 방향,” 한  
국국제교류재단 주최 제2차 한·러포럼 발표논문 (2000. 9. 29).
- 트카첸코. “러시아-북한관계의 변화와 양한관계 영향,” 한양대 중소  
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 (1993. 5. 24).
- Afanasiev, Evgeniy V. “New Leadership in Russia and Russian  
Internal and Foreign Policy, Asia-Pacific and Korean  
Peninsula Dimensions,” 한국언론재단 주최 조찬강연회 발표  
논문 (2000. 5. 24).
- “An Interview with Russian Foreign Minister Andrei Kozyrev.”  
*RFE/RL Research Report*. vol. 3, no. 28 (15 July 1994).
- Arbatov, Alexei. “Empire or great power?” *New Times*, 1. 93.
- Crow, Suzanne. “Why Has Russian Foreign Policy Changed?”  
*RFE/RL RESEARCH REPORT*, Vol. 3, No. 18 (May  
1994).
- Fedorovsky, Alexander N. “The Russian Role in Constructing a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mmunity.” 『남북경제공동  
체 건설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 통일연구원 창립9주년 기념  
제9차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0. 4. 7).
- Kounadze, Gueorgui F. “Russia’s Foreign Policy in Evolving World  
and Prospects of Russia-Korea Relationship.” 『외교』, 제31호

(1994. 9).

Kunadze, George F. "Security and Economic Situa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with Emphasis on North Korea," a paper presented for the 9th IFANS-IMEMO Conference on "Korean-Russian Cooperation at the Turn of the Century," Seoul, October 28~29, 1999

Miasnikov, Vladimir. "Russia in the New Concert of East Asian Powers," a paper prepared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New Asian-Pacific Era and Korea"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ugust 20~21, 1992, Seoul, Korea.

Tkachenko, Vadim P.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Korea and the Russian Position," a paper prepared for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Zhebin, Alexander. "North Korea after Kim Il-Sung: Hard Choice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VII, no. 1 (Summer 1995).

### 3. 기타

「내외통신」

「대한매일」

「동아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

「연합통신」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러시아 방송」  
「모스크바 방송」  
「평양방송」  
*Daily Report.*  
*Defence News,*  
*The Korea Herald.*  
*The Korea Times,*  
*Izvestiya.*

통일부. 「북한동향」.

“러시아 대통령 의회 연두교서 연설.” 『중소연구』, 20권 4호 (1996/7  
겨울).

“러시아연방 (신)군사독트린.” 『중소연구』, 18권 1호 (1994 봄).

“러시아의 외교정책: 3년간의 결과.” 『중소연구』, 18권 4호 (1994/5  
겨울).

“엘친 대통령의 안보교서.” 『중소연구』, 20권 2호 (1996 여름).

“Deputy Foreign Minister in DPRK Talks,” FBIS-SOV-94-185.

“DPRK-Russia Treaty Said Not To Undermine ROK's Interests,”



FBIS-EAS-2000-0209.

“DPRK Said To Favor Russian Nuclear Reactors,” FBIS-SOV-94-188.

“Foreign Ministry Document Outlines Foreign Policy,” FBIS-SOV-92-232.

“Ivanov Gives Putin Message to North Korean Leader,” FBIS-SOV-2000-0209.

“Ivanov Says ‘Chill’ in Russian-DPRK Relations Overcome,” FBIS-EAS-2000-0210.

“KGB Document Reveals DPRK Nuclear Potential,” FBIS-SOV-94-122.

“Moscow Hopes P’ongyang Summit Will Help Korean Reconciliation,” FBIS-EAS-2000-0614.

“Moscow, Pyongyang Contemplate Mine-Clearing Operations Near DMZ,” FBIS-SOV-2000-1031.

“NHK Interviews Russian Envoy Panov on Bilateral Ties,” FBIS-EAS-1999-0913.

“Primakov Backs More Active Foreign Policy,” FBIS-SOV-96-121.

“Putin Says North Korean Leader Accepts Invitation To Visit Moscow,” FBIS-SOV-2000-0720.

“Putin Views Supplying Booster Rockets For Space Research,” FBIS-SOV-2000-0719.

“ROK: Daily: Russia Closes Down Trade Mission in Pyongyang 10 Sep,” FBIS-EAS-96-179.

“Russian Federation National Security Blueprint,” FBIS-SOV-97-364.

- “Russian FM Issues Statement on Arrival in N. Korea,”  
FBIS-SOV-2000-0209.
- “Russia, North Korea say Treaty Signals ‘New Stage’ in Ties,”  
FBIS-SOV-2000-0209.
- “Russian Spokesman on Ivanov’s Visit to North Korea”  
FBIS-SOV-2000-0208.
- “Russia: Panov, DPRK ‘Differ’ on Ways To Reduce Tension on  
Peninsula,” FBIS-SOV-96-073.
- “Russia Ready To Participate in Consultation on Korean  
Settlement,” FBIS-SOV-2000-0615.
- “Russia: Reporter Accused of ‘Slander’ in DPRK Defector Case,”  
FBIS-SOV-96-033.
- “Russia to develop military cooperation with DPRK,” FBIS-SOV  
-2000-1018.
- “Security Council Views Foreign Policy Concept,” FBIS-SOV  
-2000-0324.
- “Activities of the Pro-Pyongyang Lobby in Russia”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7.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7.txt).
- “Arms procurement in the DPRK.”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4.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4.txt).
- “Anti-NATO Axis Could Pose Threat, Experts Say,” *Los Angeles Times*, September 27, 1999. [www.latimes.com/cgi-bin/archsearch-cgi?DBQUERY](http://www.latimes.com/cgi-bin/archsearch-cgi?DBQUERY).
- “Internal Situation,”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txt).

- “Ivanov Heads For N. Korea To Improve Ties.” *Russia Today*, Feb. 9, 2000. [www.russiatoday.com/news.php3?id=132793](http://www.russiatoday.com/news.php3?id=132793).
- “Kim Jong IL’s Regime Strengthens Its Grip on Power.”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9.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9.txt).
- “North Korean Foreign Policy after the First Session of the 10th SPA.”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4.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4.txt).
- “Reaction in Russia to Hwang Jang-yop’s Statements.”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6.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6.txt).
- “Russian Followers of Juche Ideas.”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3.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3.txt).
-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txt).
- “Russian State Duma Discussions on the Korean Problem,”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txt).
- “Russia’s Policy towards the DPRK”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3.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3.txt).
- “Russia’s Policy towards the DPRK.”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3.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3.txt).
- “U.S. Again Leads World Arms Sales.” ABC NEWS. Aug. 6, 1999. [abcnews.go.com/sections/world/DailyNews/armssales\\_990805.html](http://abcnews.go.com/sections/world/DailyNews/armssales_990805.html).
- “Visits of Russian Communists to North Korea.” [www.nautilus.org](http://www.nautilus.org).

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0.txt.

“The DPRK’s Alleged Construction of a New Nuclear Facility.”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  
\_13.txt.

“The South Asian Test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  
\_12.txt.